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24.5.27. 위촉일 기준

연번	성명	구분	주요 경력
1	이 배 용	위원장	• 現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 前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	강 혜 련	위 원	• 現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이화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 前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3	김 거 성	위 원	• 現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4	김 동 춘	위 원	• 現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 • 前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5	김 태 유	위 원	• 現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 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6	박 용 수	위 원	• 現 국립순천대학교 특임연구원(특임교수) • 前 서울대학교 사무국장
7	박 인 형	위 원	• 現 부산공덕초등학교 교사 • 現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8	배 상 훈	위 원	• 現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무처장 • 現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9	서 용 석	위 원	• 現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 前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0	양 희 준	위 원	• 現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 연구위원 • 前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11	옥 현 진	위 원	• 現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12	이 상 욱	위 원	• 現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 前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13	전 광 우	위 원	• 現 (재)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14	정 미 라	위 원	• 現 병점고등학교 교사 • 現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
15	정 원 화	위 원	• 現 경기운양초등학교 교사 • 前 서울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16	정 희 선	위 원	• 現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 • 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17	조 동 성	위 원	• 現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 前 인천대학교 총장
18	한 경 구	위 원	• 現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前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1.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위원들간 논의한 견해임을 밝혀둠

1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 특별위원회 구성 및 목표

-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미래교육이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며 물질만능주의 확산,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와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변화하지 않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모색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됨.
- 교육의 기본 가치 탐색을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24년 5월 26일부터 운영함.

2 특별위원회 운영

-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 특별위원회」는 위원별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 관련 발제와 관련 내용의 발표 및 논의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안함.

회차	일시	장소	논의 내용
1차	'24.6.20. 14:00~16:00	정부서울청사	① 운영 방안 구체화 논의 등 ② '한국의 미래, 미래의 대학' 발제 및 논의
2차	'24.7.18. 15:00~17:00	정부서울청사	① '모든 학생을 위한 유·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발제 및 논의 ② '학교의 육각형 인간 교사에 대한 고찰' 발제 및 논의
3차	'24.8.22. 16:00~18:00	정부서울청사	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국 교육, 유네스코와 문화적 접근' 발제 및 논의 ②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자상 탐색' 발제 및 논의
4차	'24.9.19. 15:00~17:00	정부서울청사	① '인구감소시대, 교육·인재양성 패러다임' 발제 및 논의 ②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교사,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제 및 논의
5차	'24.10.17. 15:00~17:00	정부서울청사	① '교육혁신과 4차산업혁명' 발제 및 논의 ②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위한 교육의 지향점' 발제 및 논의
6차	'24.11.21. 15:00~17:00	정부서울청사	① '삶의 질, 시민성' 발제 및 논의 ②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 관련 논의 등
7차	'24.12.19. 15:00~17:00	정부서울청사	① '싱가포르 교육에 비춰본 우리 교육의 시사점' 발제 및 논의 ② '교육감선거(교육자치)는 우리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에 부합하고 기여하고 있는가' 발제 및 논의
8차	'25.1.16. 15:00~17:00	정부서울청사	①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마약: 교육 현장의 현실과 예방 전략' 발제 및 논의 ② '학생 수 감소 현상과 교육의 기본 가치' 발제 및 논의
9차	'25.2.20. 15:00~17:00	정부서울청사	① '시험능력주의와 한국교육' 발제 및 논의 ② '시나리오를 통해 바라본 미래 초·중·고 교육환경의 변화' 발제 및 논의
10차	'25.3.27. 15:00~17:00	정부서울청사	①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 발제 및 논의 ② 특위 보고서 방향 검토 및 논의
11차	'25.4.17. 15:00~17:00	정부서울청사	① 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 제안 및 논의 ② 특위 보고서 내 반영될 제안 및 내용 논의
12차	'25.5.15. 16:00~18:00	정부서울청사	① 특위 보고서 초안의 검토 및 수정 논의

- 지난 1년('24.5.27.~'25.5.26.)간 12회 특위 회의를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 논의

3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17인)

('24.5.27. 위촉일 기준)

연번	구분	성명	성별	주요 경력
1	위원장	이배용	여	▶ 現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 前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	위 원	강혜련	여	▶ 現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이화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 前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3	위 원	김거성	남	▶ 現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4	위 원	김동춘	남	▶ 現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 ▶ 前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5	위 원	김태유	남	▶ 現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 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6	위 원	박용수	남	▶ 現 국립순천대학교 특임연구원(특임교수) ▶ 前 서울대학교 사무국장
7	위 원	박인형	여	▶ 現 부산공덕초등학교 교사 ▶ 現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8	위 원	배상훈	남	▶ 現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무처장 ▶ 現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9	위 원	서용석	남	▶ 現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 前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0	위 원	양희준	남	▶ 現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 연구위원 ▶ 前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11	위 원	옥현진	남	▶ 現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12	위 원	이상욱	남	▶ 現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 前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13	위 원	전광우	남	▶ 現 (재)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14	위 원	정미라	여	▶ 現 병점고등학교 교사 ▶ 現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
15	위 원	정원화	남	▶ 現 경기운양초등학교 교사 ▶ 前 서울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16	위 원	정희선	여	▶ 現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 ▶ 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17	위 원	조동성	남	▶ 現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 前 인천대학교 총장
18	위 원	한경구	남	▶ 現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前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본 보고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특별위원회』
각 위원들의 개별 주제에 대한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I. 모두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가는 지혜 **옥현진**

교육이 갖는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새롭게 창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기본가치가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해석되는 가치들도 있다. 교육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각과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문화 및 경제, 미래 사회 대처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상황과 시각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급격한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가치와 역량을 탐색하여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에서의 목소리를 지혜롭게 모아가야겠다.

1 문제 의식

- 교육 공론장을 휘감고 있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모두 100% 만족시키는 의사결정이 과연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조정하여 각기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는 힘을 한 방향으로 끌어모아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인가?
-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그 학부모에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일차적인 관심사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수능이라는 일회성 선다형 평가와 이러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 교육에 발목 잡혀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유치원 또는 초등 단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가 그동안 수행해 온 전통적인 역할에 더하여 자녀의 돌봄과 보육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교직 사회 내에서는 입시로 인해 붕괴된 교실과 교권의 회복, 업무 경감,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와 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이를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학교의 평가권에 대한 사회의 불신은 타당성보다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평가로 귀결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 일반 국민과 기업은 교육이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교육의 계획과 실행,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풍부한 지원,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벼리의 지혜: 무엇을 벼리로 삼을 것인가?

- 벼리는 복잡하게 뒤얽힌 그물망을 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중심 줄을 뜻한다. 벼리의 지혜란 각기 방향으로 뒤엉켜 있는 듯한 그물줄을 벼리가 중심이 되어 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처럼 우리 교육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무엇을 벼리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의사결정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의사결정의 일차적인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차적인 요구들을 소통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 벼리로 삼아야 할 핵심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생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묶고 구분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를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몇 가지 핵심 질문의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며, 이 교육적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가?
 - 현재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인가, 미래에 투자하는 의사결정인가?
 - 공정성(객관성)과 타당성(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 실현) 중 어떠한 속성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 수월성과 형평성 중 어떠한 가치를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3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

- 특위의 명칭인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는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기본 가치인가, 아니면 미래교육의 내용이나 결과로서 학습자가 함양해야 할 기본 가치인가?
-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공감해야 할 '우리 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한 기본 가치'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교육에 대한 기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서로의 목소리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는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앞서 언급한 벼리와 연결된다.
-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기를 바라는 '우리 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한 기본 가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은 불확실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희망의 원천이다.

- 둘째, 21세기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20세기와는 다른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 셋째, 우리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줄 세우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이 존중받고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 넷째, 학습자의 다양성과 개별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학생 선발에서 자율성이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각 기관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4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 특위의 핵심적인 역할

- 첫째, 교육계 내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한 기본 가치'에 대해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것보다는(그러한 새로운 가치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동안 국내외 교육계,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각 단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온 기본 가치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모든 가치를 같은 무게로 나열하기보다 중핵적 가치 또는 벼리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 둘째, 핵심 가치를 우선순위로 할 때 나머지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예로 학습자의 개별성과 미래 역량 강화를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수행평가나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같은 평가 방식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 셋째, 교육계와 국민을 상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한 기본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감과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최신의, 다양하고, 주류의, 신뢰할 만한 근거들이 충실히 마련되어야 하며, 그 근거와 지향하려는 가치 간에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어야 한다.

II. 미래 사회 변화와 전망

1 대한민국 교육이 당면할 미래 환경 **배상훈**

교육은 사회 생태계의 일환으로 경제·문화·정치 등 타 사회 영역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하고 진화한다.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교육이 구성원의 사고와 행위 양식을 형성하거나 유도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바로 ‘가치’이다.

가치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신념 체계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과 집단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규범(norm)으로 기능한다(Hofstede, 2001). 이러한 가치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는 ‘역사의 산물’이다. 그러나 가치가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가치는 점진적으로 수정되기도 하며,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의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교육이 직면하게 될 사회 환경들을 진단하고, 그에 기반하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미래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관점과 분석 틀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우리 교육 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네 가지 주요 환경 요인을 제시하고, 이들이 미래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인구 감소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2020)이 발간한 『2024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년 후인 2033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44년에는 노동 가능 인구가 약 1,000만 명 감소하고, 2058년에는 1명이 다른 1명을 부양하기조차 어려운 인구 구조와 경제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처럼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는 국가 차원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에 있어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한다.

인구 감소 시대에 미래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0명의 학생에게 100개의 성공 모델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

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핵심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화 시기에 효과적이었던 ‘획일성과 균질성’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의 경제력과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미래교육이 지향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가치는 ‘협력과 공존’이다. 다양성과 창의성, 협력과 공존은 단지 선언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육 과정 전반과 교수-학습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실천적 가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발전시키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족이며, 교육은 다음 세대가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동체적 삶의 회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 사회 양극화

현대 한국 사회는 이념, 경제적 지위, 세대, 젠더 등 다양한 축을 중심으로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비극적인 한국 전쟁과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일부 세대는 정치적 입장에서 극단적인 좌파와 우파로 분열되어 서로를 타협과 공존의 대상이 아닌 제거해야 할 ‘적(敵)’으로 바라보기도 한다(박명림, 2002; 이정우, 2020). 게다가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고 통합을 도모해야 할 정치권 역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모습마저 드러내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 역시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물가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통계청, 2024).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일군 부(富)를 개인의 노력과 역량의 결과로 정당화하며, 사회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인식 보다는 ‘능력주의(meritocracy)’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인식과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박남기, 2017).

최근에는 세대 간 갈등도 두드러진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원을 점유한 기성세대를 기득권 집단으로 인식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서가 계속될 경우, 이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좌절과 불신을 넘어 사회적 통합의 약화와 국가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사회 내 집단 간 갈등과 양극화가 더욱 구조화된다면,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의 구현은 어려워진다.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집합적 활력이다. 그러나 양극화는 이러한 사회적 낙관성과 에너지를 잠식하고, 이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는 ‘포용’과 ‘지속가능성’이다. 미래교육은 타인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다른 관점과 경험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즉, 미래교육은 단지 지식의 전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인 ‘포용’, ‘상생’, ‘지속가능성’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미래 세대는 교육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다. 디지털 대전환

최근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직업 구조, 일의 방식, 삶의 양식, 인간관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특정 산업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으며(권현영, 2022), 사회가 이러한 디지털 변화에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와 같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결합하여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대폭 높였고, 학습 비용을 절감해서 학습 체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기술은 학교와 교사가 수행하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제언을 통해 교원이 담당하는 여러 업무를 효율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즉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OECD(2021)는 디지털 기기 접근성, 디지털 문해력, 인터넷 접속 환경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교육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학생은 고소득층과 비교하여 디지털 교육 환경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어 학업 성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나타난다. 교사의 디지털 역량은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수업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이경숙, 김수정, 2021). 따라서 미래교육 체제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교사 연수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교사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와 윤리의 정립이 요청된다. 디지털 기반 교육 체제에서 일어나는 정보 탐색, 평가, 소통, 생산 등의 학습 활동은 교육 공동체가 지켜야 할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행위 규범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교육 체제의 도입을 넘어 인공지능과 공존할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립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지속 가능 사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지리적으로 수만 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유럽산 천연가스 및 국제유가, 세계 곡물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문제이다. 이와 유사하게, 점차 심각해지는 글로벌 기후 위기는 한반도에 전례 없는 고온 현상과 열대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 평화’와 ‘환경 보존’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추상적 구호나 수사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존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인류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편,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해지는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 간 경쟁도 심화하는 역설적 현실도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교역에서 나타나는 각국의 자국 이기주의는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이재훈, 2019), 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역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 대학과 막대한 연구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도 첨단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과 더불어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이동은 첨단 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중견 기술 인력의 국가 간 이동도 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농촌과 제조업 현장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교육은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함양하고, 세계 평화와 환경 보전 등 글로벌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들을 내면화해서 실천할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즉, 앞으로 교육 체제는 미래 세대가 글로벌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세계 시민(global citizen)’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은 하나의 사회 제도(social institution)로서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Tyack & Cuban, 1995). 설령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점진적으로 변화가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이 직면한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교육의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육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변화를 끌어내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교육이 지향할 기본 가치를 정립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2 2050년 대한민국 교육환경의 시나리오 **서용석**

본 시나리오의 방법론은 미국 하와이대학 ‘마노아 학파(Manoa School)’에서 제안한 방식을 준용하였으며, 미국의 1세대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Jim Dator)는 사회,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네 가지 일반적 미래(Four Generic Futures)’ 또는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 원형(공통 이미지)’이라고 부른다. 이 네 가지 이미지는 ▶지속 성장(현재의 문제와 기회 지속) ▶붕괴(시스템 위기와 후퇴) ▶규율 사회(강력한 통제와 집단적 규율) ▶변형(근본적 가치·체제 변화)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시나리오의 공간적 범위는 미래의 대한민국으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Time Horizon)는 2050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 2025년 대한민국 교육환경의 4가지 시나리오

4가지 원형에 기반한 2050년 대한민국 교육환경의 4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속 성장(현재의 문제와 기회 지속)’ 시나리오다. 2050년 대한민국 교육은 기술 발전과 저출산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고 지역 간 격차는 심해졌지만, AI와 VR 등 디지털 기술 덕분에 개인 맞춤형 학습이 보편화됐다. 학생들은 AI 튜터로부터 맞춤형 피드백을 받으며, 창의성·협력 중심의 융합형 수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수도권과 부유층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와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입시제도는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창출했다. 중장년층을 위한 평생교육도 활성화됐지만, 이 역시 지역과 예산에 따라 편차가 컸다.

두 번째 ‘붕괴(시스템 위기와 후퇴)’ 시나리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초·중·고 공교육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한 것을 상정하였다. 심각한 저출산과 예산 부족, AI 기반 사교육의 확산으로 대부분 학교가 문을 닫았다. 학교가 가진 사회적 기능이 무너지며 공동체 교육이 약화되었고,

빈곤층 학생은 더욱 소외됐다. 사람들은 뒤늦게 공교육의 가치와 공동체적 의미를 깨달았지만, 이미 학교 복원은 어려운 상태다.

세 번째 ‘규율 사회(강력한 통제와 집단적 규율)’ 시나리오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학교가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정부는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강력한 환경보호와 공동체 의식을 심어줬지만, 개인의 자유 침해 논란과 새로운 형태의 지역 격차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협력적이고 생태적인 삶의 방식이 학생들에게 확산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네 번째 ‘변형(근본적 가치·체제 변화)’ 시나리오에서는 교육 시스템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변화한 모습을 상정하였다. 학교는 물리적 공간이 축소되고 AI 중심의 개인 맞춤형 학습이 보편화됐다. 학생들은 가상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학습 모듈을 선택했고, 전통적 학령 구분은 사라졌다.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에서 학생의 윤리적·정서적 성장을 돕는 멘토로 바뀌었다. 학생의 성취는 디지털 포트폴리오로 관리되며, 이를 기반으로 대학 진학과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시나리오를 통해 바라본 교육환경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시나리오를 통해 바라본 2050년의 대한민국 교육은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와 함께, 사회적 격차와 공교육의 위기라는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기술과 인간성,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교육 양극화와 공동체의 해체라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균등화 정책

기술 발전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기 보급과 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 최소한의 교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육 재정 배분 시 학생 수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 인프라 수요를 우선 고려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2) 공교육 시스템 혁신과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학교 폐쇄나 통폐합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학교의 존치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보

조금 확대가 필요하다. 공교육이 기술 발전과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AI 기반 플랫폼, AR·VR 콘텐츠 등 첨단 교육기술의 공공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 사교육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형 에듀테크 플랫폼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초중고 교육의 사회적 가치 회복

학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함양과 윤리적 시민을 키우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성교육’, ‘공동체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면형 프로젝트, 환경·생태적 활동 등 오프라인 수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4) 평생교육과 재교육 체계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은퇴자, 중장년층 등이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공공 교육센터, 지역 거점 교육기관 운영을 확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5)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기후·환경 교육 의무화

기후 위기에 대응해 학생들에게 환경보호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기후·생태교육을 국가 차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평가가 필요하다. 학교 시설 자체를 친환경 스마트 빌딩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이 직접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입시와 평가제도 개혁을 통한 교육 양극화 완화

현재의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성적 중심의 평가를 넘어 학생들의 협력, 창의성, 사회공헌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나 사교육 이용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공정한 학습 기회 제공 정책이 필요하다.

7) 디지털 교육의 윤리적·법적 규제 강화

AI 기반 개인 맞춤형 교육과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투명한 기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윤리적 점검과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8) 글로벌 협력과 국제 교육 네트워크 강화

우리나라 교육이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면, 국제 교류 프로그램 및 글로벌 공동 학습 프로젝트를 지방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 협력과 교류를 통한 학습 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결국, 위의 시사점들을 종합할 때, 기술 발전과 사회적 문제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재정 투자, 지역 균형 정책, 공동체적 가치 강화, 윤리적 규제가 중요하다.

3 AI 기반 디지털 시대의 도전¹⁾ 이상욱

이 장의 앞 절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의 일반적인 양상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의 교육환경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널리 활용되는 미래 디지털 시대가 제기하는 여러 도전적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가. AI 기반 디지털 시대의 도래

인공지능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한 것 같다. ‘마침내’라는 수식어를 단 이유는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의 지적인 행동을 인간과 구별되지 않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하리라는 인공지능학자들의 전망이 최근까지는 번번이 어긋났기 때문이다. 1950년대 인공지능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존 맥카시’나 ‘마빈 민스키’ 등의 선구자들은 늦어도 수십 년 내로 인간의 모든 지적인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 믿었다. 1980년대 ‘병렬 처리’라는 획기적 계산 알고리즘이 주목받을 때 역시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이번에는말로 인공지능이 조만간 사회 전체에 널리 사용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선부른 기대는 이후 연구가 여러 이론적, 실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번번이 포기되었고,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연구 지원이 끊기고 전망이 없는 분야 취급을 받는 소위 인공지능 연구의 ‘겨울’을 경험해야 했다.

1) 해당 내용은 본 특위의 이상욱 위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행물 <교육광장> 제89호(2025년 4월 15일 간행)에 기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됨.

하지만 2005년 이미지 판독을 시작으로 기존 인공지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신경망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등장했다. 이후 인공지능 연구는 자연언어 처리나 단백질의 3차 구조 예측처럼 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으로 생각되던 분야로도 확장되었다. 특히, 2022년 11월에 등장하여 세계적으로 ChatGPT 열풍을 일으킨 생성형 거대언어 모형(LLM) 인공지능의 등장은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 오랜 기간 도달하기 어려운 성배처럼 여겨졌던 ‘일반 인공지능(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이 곧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다주었다.

우리나라 교육이 당면할 환경은 여러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 전체에서 강조하듯 전통적 가치 중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새로운 시대 변화에 꼭 필요한 가치를 잘 선별하여 이를 교육 환경에서 실현시키려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미래교육이 지켜나가거나 지향할 기본 가치와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칠 환경 변화, 특히 디지털 기술로 인한 환경 변화는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 방식에 집중하여 살펴보고 그 대응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술?

한때 ‘기술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광고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섬에 갇힌 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부러워했던 이카루스의 꿈이 ‘인조 날개’로 해결되는 이야기가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깃털 사이의 밀랍이 녹아 바다에 추락하고 만다. 누군가는 이를 자신의 한계를 기술의 도움으로 무리하게 극복하려는 인간의 자만심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카루스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도 기술이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도구’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 관점은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건설 장비 중에 ‘굴착기’라는 것이 있다. 사람의 손을 닮았지만 사람 손으로 퍼내기에는 어림없는 양의 흙을 퍼낼 수 있다. 자동차는 사람의 발보다 훨씬 빨리 사람을 이동시켜 준다. 결국 굴착기도 자동차도 인간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적 도구인 셈이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기술적 확장이 ‘진화(evolution)’, 즉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굴착기를 사용하기 전에 삽을 사용해서 흙을 퍼냈고, 자동차를 사용하기 전에는 말이 끄는 마차를 사용해서 이동했다. 그런데 생물학적 진화와는 달리 기술적 진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윈이 강조했듯이 생물학적

진화는 특정 환경에 최적화하도록 진행되기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의 방향은 바뀔 수 있다. 추운 지역에 살던 털이 긴 동물이 기후 변화로 따뜻해지면 털이 점점 짧아지는 진화 압력을 받게 된다. 그에 비해 인간 능력의 기술적 확장은 20세기 초 이탈리아와 러시아의 미래파 예술가가 강조했듯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다. 탈숙련(deskill)과 인간 기술 공진화(co-evolution)

정말 그럴까? 자동차가 인간의 ‘걷는’ 능력을 확장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방식은 ‘빨리 걷는’ 방식이 아니라 바퀴라는 인간 신체에는 없는 기술적 장치를 활용하여 공간적 이동이라는 결과를 사람이 직접 걸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손쉽게 얻어내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적 확장은 대부분의 경우 인간 능력이 발휘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바퀴나 세탁기의 회전통처럼 과정은 다르지만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기능적(functional)’ 확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은 인간과는 매우 다르지만 입력값과 출력값의 대응 관계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능적 확장이 인간의 육체 능력만이 아니라 정신 능력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란 튜링’이 수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공지능의 시대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경망 기반 인공지능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의식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고도의 지적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매우 ‘낮선’ 지능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인간의 확장으로만 보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탈숙련(deskill)’의 문제이다.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기억하는 전화번호가 거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네비게이션으로 길을 찾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택시 운전사들도 복잡한 골목길을 외우고 다니지 않는다. 이처럼 인간이 하던 인지적 능력을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 사람들은 전에는 통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잘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재난 상황에서 휴대전화나 네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전화번호나 길을 모두 기억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다시 이 능력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화 기술이 우리의 능력을 영구히 제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전화번호 암기와 길 찾기 능력이 ‘금방’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상당 기간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숫자나 길을 암기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인지 능력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실질적

으로’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과학 연구자 중에는 학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영향력이 큰 논문을 찾고 심지어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실험을 설계하는 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과학자들을 만나보면 ‘시킨 일을 밤새도록 불평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는 똑똑한 연구보조원을 전기세만 주고 고용한’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환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에 가끔씩 명명한 결과를 내놓는 인공지능을 자신이 교정해 주기는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구 생산성 향상은 놀라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연구자들이 어느 순간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서 연구를 못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다시 혼자 연구하는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막 연구에 입문한 초심자들이다. 이들이 연구 시작 단계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모든 일을 맡겨 버린다면 숙련된 연구자들과 달리 나중에 생성형 인공지능 없이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얻을 기회조차 잃을 것이다. 가상적으로 이런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계에 유입되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들은 나이가 들어 연구계를 떠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미래 인류는 ‘분명한’ 인지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인간이 확장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표현 자체의 문제가 드러난다. 우리는 기술적 도구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변화’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화 기술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탈숙련 현상은 이런 생각이 잘못임을 잘 보여준다. 항상 자동 온도 조절이 되는 사무실에서만 일하다 보면 덥거나 추운 바깥 환경에서 열사병이나 감기에 걸리기 쉽다. 계산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간단한 사칙연산도 암산으로 하기 어려워진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인공지능 도움 없이 일하는 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필자가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지내고 모든 계산을 암산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인지능력, 특히 길고 복잡한 글을 읽고 그에 바탕한 깊은 사고를 하는 능력을 훼손하기예,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니콜라스 카’의 제안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점은 얼핏 보면 인공지능을 포함한 여러 편리한 기술이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기술적 확장에 익숙해진 우리는 그 기술 없이 독자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기술을 일방적으로 우리 능력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용의 과정에서 우리의 고유한 능력을

‘축소’하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대체할 잠재력이 있는 인공지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생명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 변화하는 현상, 즉 공진화(co-evolution)는 흔하게 볼 수 있다. 포식자는 피식자의 회피 행동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식자는 포식자를 좀 더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해 서로 점점 더 빨라지고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곤 한다. 이를 군비 경쟁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소개된 붉은 여왕의 유명한 설명에 빗대어 ‘붉은 여왕 효과’라고도 한다. 하지만 공진화가 항상 적대적인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혼자 살 때보다 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생태계에 적응하며 공진화하는 생명체들도 많다. 이런 공생적 공진화가 극단에 이르면 상대방이 없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산호초와 같은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와 기술의 관계는 공진화 중에서 공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우울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기술도 분명 있다. 하지만 전쟁 기술을 제외한다면 기술 설계자가 이런 악영향을 의도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보다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혹은 산업적으로 잘 팔릴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현대 기술이 인간과 본질적으로는 협력적 공진화의 과정에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라. 미래 역량으로서의 디지털-AI 리터러시

이상의 내용이 학습환경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 갖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로서 학습자나 교수자의 역량을 강화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특정 능력은 강화되지만 다른 능력은 탈숙련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바람직한 학습 환경’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위임하지 않고 견지해 나가야 할 ‘핵심 역량(core-skill)’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일이다. 그런 다음 이 핵심 역량에 대해 탈숙련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습 능력이나 업무 능력을 높이는 일만큼이나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 방향은 기술의 내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 있기보다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에 기술 발전이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 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적극적 존재인 인간은 인류의 미래에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미래지향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상수값으로 두고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묻는 방식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보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우리가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미래 리터러시 혹은 미래 문해력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된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미래 사회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현재의 디지털 시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미래 대응 능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Ⅲ. 글로벌 사회의 미래교육 대응

1 UNESCO의 미래교육 계획 **한경구**

가. 대한민국과 유네스코의 긴밀한 교육 협력

유네스코(UNESCO)는 인류가 두 차례 큰 전쟁을 겪고 난 뒤 평화를 위해 1945년에 설립된 유엔의 전문 국제기구이다. 유네스코는 흔히 ‘세계유산’이나 ‘무형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유네스코가 창설된 것은 교육, 과학, 문화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교육은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네스코 헌장 서문은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야말로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하여 너무나 자주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무지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이야말로 유네스코의 가장 기본적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과 감시하에 총선거를 치르고 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가입은 1949년 2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 그런데 유네스코는 유엔과는 달리 거부권 개념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가입 신청은 1950년 6월 14일, 그러니까 6.25 발발 열하루 전에 실현되었다. 유네스코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여 한국의 교육 재건과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가입이 번번이 좌절되던 시기 유네스코는 우리나라가 유엔 체제에서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 한국은 유네스코가 지원한 국가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며 다양한 유네스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범적인 회원국이다.

한국 교육에 대한 유네스코의 지원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1952년 후반기에 이미 시작되었다. 유네스코는 운크라(유엔한국부흥단)와 함께 교육계획사절단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재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고 문교부는 보고서의 권고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소화하기 위해 이를 번역했다. 유네스코는 또한 1954년에 운크라와 함께 영등포에 국정교과서

인쇄공장 설립을 지원했으며 여기에서 매년 3천만 권 이상 발행된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1954년 1월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되어 문해교육과 청년 교육 및 청년 운동을 통한 국가 재건 기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미래 세대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활동을 펼쳤다. ‘유네스코 학생건설대’의 대학생들은 농촌 지역 비문해 퇴치, 생활 개선, 영농 지도,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1956년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서울대 농과대학 캠퍼스 내에 설립된 신생활교육원은 농촌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한국의 농촌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유네스코가 초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것은 우리나라 초등 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였다. 초등교육 의무화는 1948년 제헌헌법에 이미 명시되었으나 취학률은 수치상으로만 높았고 학교 시설과 교육의 질은 매우 열악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3년 카라치 플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1964년에는 유네스코의 조사단이 파견되어 정부와 공동 조사를 수행했다. 이렇게 초등의무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 개선에 노력한 결과 해방 당시 80%에 달하던 비문해율을 1980년대에는 10% 이하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국내 학교들은 1961년부터 유네스코 협동 학교 네트워크(ASP net)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그 수는 400개를 넘고 있다.

한편, 세계교육의 해인 1970년부터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개념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자료를 번역하고 사회 교육기관 현황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1973년에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한 ‘제1차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해 평생교육 논의를 활성화했다. 1980년 개정 헌법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조항이 세계 최초로 명시되었고 1982년에는 사회 교육법이 제정되어 평생교육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와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사회 건설이 정책 목표로 설정되었고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2008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평생교육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제도와 운영체제 구축, 교과서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등에 노력하여 교육을 현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유네스코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나. 유네스코의 국제 교육 담론과 한국

유네스코는 1945년 창설 당시부터 국제적으로 중장기적인 미래교육담론을 이끌어왔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를 위해 창설되었기에 유네스코는 평화와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우 강조하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불평등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발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향상에 노력하면서 성인교육과 평생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1949년에 유네스코는 제1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Conference Internationale sur L’éducation des Adultes)를 덴마크 엘시노어에서 개최하여 성인교육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하고 다른 문화와의 조화와 평화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제2차 회의는 1960년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때부터 변화하는 사회에서 성인교육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65년 파리에서 세계 성인교육발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프랑스의 랑그랑이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일생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평생교육’ 개념을 제안했으며 초, 중, 고,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문화의 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1968년 프랑스와 미국을 시작으로 학생과 노동자들은 대학의 권위주의적 구조와 사회 전체의 구태의연함에 대해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펼쳤으며, 여러 나라로 확대되며 대학의 민주화와 교육의 평등한 기회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유네스코는 국제교육발전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위원장은 프랑스 교육장관 이턴 에드가 포르, Edgar Faure)를 구성하여 1972년 세계 교육의 미래에 관한 선언적 보고서인 포르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한국에서는 1975년 『인간화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2021년 재번역)이라는 공식 명칭의 포르 보고서는 스튜던트 파워로 고조된 사회적 위기감과 기존 교육 체계에 대한 근본적 비판, 그리고 젊은 세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엘리트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평생교육, 학습사회, 인간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특히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유네스코는 포르 보고서를 통해 교육을 단순히 지식 전달이나 경제적 성장의 수단으로 보는 것을 넘어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 민주주의 실현 등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관점을 강조했으며 특히 동 보고서를 통해 시작된 평생교육과 학습사회 논의는 이후 유네스코의 들로르 보고서(1996), 교육의 미래(함께 그리는 우리의 미래) 보고서(2021) 등으로 이어지는 등 미래교육 담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포르 보고서를 발간한 2년 뒤인 1974년 유네스코는 국제이해교육 권고(공식 명칭: ‘국제이

해, 협력, 평화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에 대한 권고’를 제정하여, 모든 교육이 진정한 국제이해와 협력, 세계평화를 가로막는 국가 간 긴장과 모순의 정치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냉전 시기의 대립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 그리고 인권과 평화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창설 초기부터 각국 교과서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로잡고, 타국과 타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와 기존의 상호이해 교육은 구조적 폭력이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간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교육이 평화·인권·정의 실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등장했다. 1974년 권고는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다자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한 최초의 국제 교육 규범으로서 회원국들은 권고의 취지에 따라 자국 교육 정책에 국제이해, 인권, 평화교육 요소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 권고는 세계시민교육(GCE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토대가 되었으며,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는 권위적 정부 아래서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경제 성장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으나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적 상호의존과 글로벌 시민성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0년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유네스코의 카테고리 II 기관의 하나로서 국제이해교육을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으로 확장, 발전시키는 등 국제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2023년 동 권고의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세계는 포르 보고서 이후 20년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세계화, 정보화, 기술혁신, 사회적 불평등, 환경 위기 등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체계의 한계가 다시 문제시되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등장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와 인본주의적 교육, 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 등 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21세기 사회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자크 들로르(Jacques Delors)를 위원장으로 ‘21세기 교육을 위한 국제위원회’를 구성하여 1996년 들로르 보고서를 발간했다.

『학습: 숨겨진 보물』(*Learning: The Treasure Within*)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교육의 4대 기둥(Pillars of Learning)을 제시하고 포르 보고서에 이어서 평생학습을 강조했으며 교육의 사회적 역할, 즉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빈곤 해소, 사회 통합,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에 기여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교육의 질과 기회를 높이고,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지향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의 4대 기둥이란, 첫째, 지식 습득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둘째, 직업적 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협업 능력을 함양하는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셋째, 타인과의 이해, 평화, 관용, 문화적 다양성 존중 등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넷째, 상상력, 창의성, 인성, 영성 등 개인의 전인적 성장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이다.

또한 교육을 모든 인간의 권리이자 공동의 선(common good)으로 바라보면서 사회적 포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재정의했으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배움의 형태를 존중하는 등 비형식·비공식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우리나라의 1995년의 5.31 교육개혁은 입시경쟁 완화, 창의성·자율성 확대, 정보화 대응 등 한국 사회의 교육개혁 요구와 국내적 필요성이 주요 배경으로서 들로르 보고서의 발간 이전에 발표되었으나 지식기반사회 준비, 개방적 학습사회 구축, 학생의 창의성과 다양성 중시, 평생교육의 토대 마련 등 국제적 교육개혁 담론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들로르 보고서의 발간은 1999년 평생교육법의 제정 등 평생교육 패러다임 확산과 정책화, 교육의 다양성과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의 도입, 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재조명 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유네스코의 미래교육 방향과 한국 교육 변혁을 위한 활용

유네스코는 2021년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라는 세 번째 미래교육 보고서를 발표하며 19세기 산업혁명기에 구축된 학교 모델과 교과과정, 교수법 등이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디지털 전환 등 오늘날의 복합적 위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교육의 변혁을 요청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교육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첫째, 모든 사람에게 평생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 둘째, 교육은 공공재인 동시에 공동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미래교육의 핵심 방향은 대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미래를 내다보며 한국의 교육을 혁신하는 데 크게 참고가 된다.

첫째는 사회적 역량과 연대의 강화로 협동, 협력, 연대, 상호의존성, 포용 등 사회적 역량의 함양을 미래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체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역량들이다.

둘째는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문해력으로서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언어적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문해력 등 다양한 문해력 교육이 필수적이며, 정보의 진위와 의미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셋째는 교사의 역할의 재정의로 교사가 ‘협력적 직업’임을 강조한다. 즉,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공동체의 촉진자이자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협력적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넷째는 학교의 공간적, 사회적 변혁이다. 학교는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면서 동시에 사회 변화에 맞춰 혁신이 필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교 환경과 문화의 대대적 변화, 포용적이고 유연한 학습 공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는 기술 발전과 디지털 사회에 대한 대응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 교육은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새로운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 기술 활용 역량 강화, 인간성과 기술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 등은 미래교육의 중요한 과제들이다.

여섯째는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며,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 교육재정 확대, 교육 접근성 보장 등 실질적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유네스코의 2021 미래교육 보고서는 기존 교육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연대와 포용, 비판적 문해력, 교사의 변혁적 역할, 학교의 혁신, 기술과의 조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은 전 세계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과제인 동시에 한국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며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대학 입시를 둘러싼 경쟁과 사교육의 폐해가 여전히 심각하며 교육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평생교육 또한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면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지역 특성이나 현장의 자율성, 시민사회의 참여는 아쉬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유네스코의 포르 보고서와 들로르 보고서가 근본적 교육혁신을 요구했고 상당한 부분적 개선과 긍정

적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체계, 교과과정, 평가방식 등에서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유네스코의 2021년 미래교육 보고서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교육 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은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 사회 불평등, 기술 변화 등 오늘날의 복합적 도전은 더 이상 변화를 늦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의 시점에서 재편하고 평생교육의 앞 단계를 구성하는 학교교육은 과연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특히, 교육을 단순한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재이자 공동재(a common good)’로 규정하면서 교육에 대한 전 사회적 참여와 협력, 연대의 가치를 중시를 시사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미래교육 보고서는 한국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강조하면서 변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저런 사회적 저항을 줄이고 변화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변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변혁 노력에는 저항도 만만치 않고 오해도 클 것이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잿더미에서 일어나 교육을 통해 발전했으며 유네스코의 가장 모범적인 회원국으로 성장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가까운 장래에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여러 회원국들과 함께 고민하며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을 선도하고 지원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과 유네스코가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비전과 제안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소통을 제안하며 개최한 국제심포지엄(2024년 12월, 수원) 등 우리의 다양한 노력이 미래교육 관련 국제담론과 실천을 선도할 것이 기대된다.

2 OECD의 미래교육 계획 **옥현진**

가. 배경

OECD는 21세기 교육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담론을 생성하고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이며, 실제로 각 국가의 교육 계획과 실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OECD가 지난 1990년대 말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제안한 ‘역량(competencies)’ 담론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수 국가의 교육과정을 역량 기반으로 개선하

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 OECD가 각 국가의 공교육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만 15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행 중인 PISA 평가 및 관련 보고서들은 각 국가의 교육 정책에도 환류되고 있다.

OECD의 미래교육 계획을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OECD 학습 나침반 2030’(OECD Learning Compass 2030; 2019년)과 ‘OECD 교수 나침반’(OECD Teaching Compass, 2025년)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이 두 모델의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OECD 학습 나침반 2030’과 교육적 시사점

[그림 III-2-1]은 OECD가 제안한 ‘학습 나침반’의 개념을 집약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교육의 목표를 웰빙(well-being), 즉 학습자 개인의 웰빙과 사회적 웰빙으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길을 여러 갈래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에서 학습자들이 각기 다른 삶의 경로, 알려지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공교육은 학습자 각각의 개성과 성향에 맞게 다양한 진로를 안내하고, 각자의 나침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상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여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미지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항해술로서 탐구 역량이다.

셋째, 교사, 학부모가 길을 앞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에게 주도성(student agency)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토대가 되는 역량(core foundations) 요소로 전통적인 3R 외에 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리터러시, 육체적·정신적 건강, 사회정서 역량, 도덕성과 윤리의식 등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극한의 경쟁과 대립을 극복하고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강한 정신적 토대와 사회적 역량을 조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 즉 현재의 상태를 보다 웰빙의 상태로 변혁시키는 힘을 강조하고 있다. 이 힘은 크게 세 요소, 즉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creating new value), 갈등과 딜레마 조정하기(reconciling tensions & dilemmas), 책임감 갖기(taking responsibility)로 구성된다. 우리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 요소의 반영 정도,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림 III-2-1] ‘OECD 학습 나침반 2030’의 개념도



여섯째, 학습의 방식으로서 예상(anticipation), 행동 또는 실천(action), 성찰(reflection)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성찰은 그동안의 교수학습 모델에서 부각되지 않은 요소로서 학습자의 메타인지, 그리고 인성과 사회정서적 측면을 향상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일곱째,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주체로서 동료 학습자, 교사, 학교, 학부모 등의 공동 주도성(co-agency)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 및 존중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이들이 교육의 공동 주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교육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다. 'OECD 교수 나침반'

2025년 발표된 'OECD 교수 나침반'은 앞서 제안한 'OECD 학습 나침반 2030'의 비전이 교사의 역할 변화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이 새로운 모델을 통해 학생 주도성과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사의 주도성, 전문적 정체성, 역량이 강조되어야 하며 교사의 웰빙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III-2-2] 참조).

이 모델의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상황도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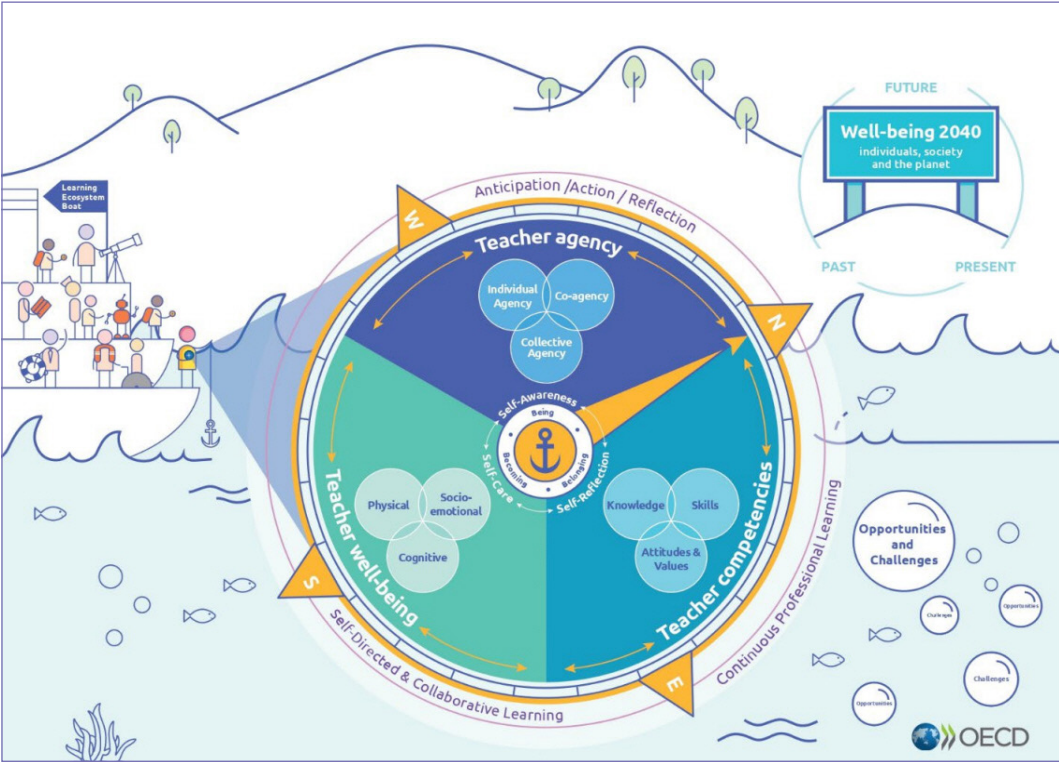
- 글로벌 교사 부족과 과중한 부담: 교사 수급 불균형, 직무 스트레스, 소진(번아웃증후군) 등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
- 디지털 전환과 AI의 부상: 교육 환경에 급격히 도입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교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
- 교육 개혁의 실행 격차: 교육과정 목표와 교사 역량 간의 불일치로 인해 교육과정 개혁이 교실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현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사 나침반은 교직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여 교사들이 교육 변화를 주도하는 '행위자(agents)'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우리 사회와 교육 체제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림 III-2-2]에 제시된 'OECD 교수 나침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 공유된 미래 비전 정립(Making the future we want a reality): 교육을 개인적·사회적·지구적 웰빙과 연결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미래 지향적 목표를 향해야 함.
- 교사 내면의 닻(Anchoring the Compass):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존엄성, 목적의식이 변화의 토대이며, 자기성찰·자기돌봄·소속감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교사 주도성(Teacher agency): 교사는 교육과정 변화를 단순히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장의 맥락 속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함.
- 교사 역량(Teacher competencies): 지식·기술·태도·가치를 통합하여 불확실성과 복잡한 교육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적응적 전문성이 강조됨.
- 교사의 웰빙(Teacher well-being): 직무 만족과 심리적 안전성을 포함한 포괄적 웰빙을 보장해야 지속 가능한 교직 수행과 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능함.
- 학습 생태계 속의 교사(Teachers in a learning ecosystem): 교사는 가족, 지역사회, 정책결정자,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함으로써 집합적 영향력(collective impact)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그림 III-2-2] 'OECD 교수 나침반'의 개념도



이처럼 'OECD 교수 나침반'이 'OECD 학습 나침반 2030'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교사의 역할을 구체화함으로써 이 두 모델은 향후의 교육 구상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OECD 교수 나침반'은 향후 각종 교원 관련 정책 수립과 교원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3 해외 주요 국가 교육개혁 사례 강혜련

각 국가는 고유한 사회, 문화, 경제적 맥락 속에서 자체적인 교육 철학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에 교육개혁은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이민자 유입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에서 위상 하락이나 국내 교육 불평등 이슈 등 직간접적 교육 관련 이슈들이 국가 미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많은 국가가 교육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살펴본 UNESCO 및 OECD가 제시한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함께 이 장에서는 교육격차 문제를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로 돌

파한 미국의 사례, 최상위 교육 모범국가에서 지금은 고전하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 그리고 역량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 강국으로 부상한 싱가포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국 교육개혁 사례: 중앙정부 역할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²⁾

미국인이 공감하는 가장 고질적인 교육문제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생 집단 간 교육 불평등 문제이다. 미국에서 공교육은 주정부 및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지므로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 여건도 불가피하게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학업성취의 격차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2000년대 이후 들어선 4개 행정부 중 G.W. 부시,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여 교육개혁을 주도했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개혁적인 교육정책보다는 주정부 및 학교의 자율성 강화 등을 강조하며 연방정부의 개입을 축소시키고자 했다.

1) 학업성취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

G.W. 부시 행정부는 계층 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아동낙오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 Act, 2002)을 제정하여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전까지는 취약계층 지원에 연방정부의 역할이 국한되었음) NCLB 제정 이후 연방정부는 모든 학교에서 전국 단위의 읽기와 수학 학업성취도 시험을 실행하고 연간 도달 목표를 설정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 예산 배분, 교사의 역량 및 자격 강화, 성취도 미달학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개별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성취도 기준을 모든 학교에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평균 성취도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 밀집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어들거나 표준화 시험과 관련되지 않은 과목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뒤이어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는 NCLB를 대체할 후속 개혁안으로 ‘학생성공법’(ESSA; Every Student Succeeds Act, 2015)을 마련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말기에 도입한 ‘학생성공법’(ESSA)은 NCLB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교육 목표와 달성방법에 대해서는 각 주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기준을 설정하게 하였고, 성취도를 증진하기 위한 자구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허용하였으며 각 주가 교원평가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했다.

2) 미국 사례에 관한 내용은 김이경·박진·김경현 (2024)의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문장별 인용 표기를 생략함.

2)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

교육 불평등 문제는 학생 시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취약계층 교육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었던 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문제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개혁 기조와 목표는 교육의 기회 보장과 불평등 완화로 요약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미국 사회를 견인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이 성장배경과 상관없이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교육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보장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접근성 확대와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지원정책에 힘을 쏟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교육정책 공약에서부터 꾸준히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강조하면서 유아 무상교육을 추진해 왔다. 핵심 내용은 모든 아동이 만3세부터 가정 배경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유아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제공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학생의 학교 준비 수준을 높여 학생 집단 간 성취도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 다만 이러한 유아교육 접근성 확대는 주 정부별로 실행 정도에 차이가 있고 시설 확충 등 인프라의 제약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는 국민의 교육기회 보장 차원으로 무상 유아교육과 함께 2년간의 무상 고등교육도 추진했다. 이는 등록금을 비롯한 높은 대학 비용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여론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에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K-12)로 여겨져 온 공교육 체계를 유아학교에서 시작해 대학 2년 차까지 총 14년의 기간(P-14)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여기서 무상 고등교육은 주로 공립 2년제 전문대학인 커뮤니티칼리지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커뮤니티칼리지와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대학 진학자의 수수료와 재등록료를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도 추진했다.

나. 핀란드 교육개혁 사례: 경제·사회적 현안의 해결³⁾

매 3년 주기로 시행되는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핀란드 학생들이 첫 주기에 있던 2000년 이후 몇 주기 동안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는 핀란드의 교육시스템에 주목하였다. 핀란드의 교사는 최소 5년 이상의 석사 학위를 지닌 교육 전문가로 사회

3) 핀란드 사례에 관한 내용은 김이경·박진·김경현 (2024)의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문장별 인용 표기를 생략함.

적 신뢰가 매우 높았고 지방 분권적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 등이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주기부터 핀란드 학생의 PISA 점수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다. 학력 저하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이민자 유입 증가,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의 심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아울러 핀란드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숙련된 고급 노동력의 부족으로 생산성 둔화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는 청년층의 낮은 교육수준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는데 핀란드 고교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약 35%에 불과하다. OECD는 핀란드의 고급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과도하게 엄격한 대학입학제도 개혁, 대학입학 정원 확대, 외국인 고숙련 근로자 유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존 교육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되어 최근의 교육개혁을 촉발하게 되었다. 2019년에 30대의 밀레니엄 세대인 산나 마린 총리가 집권하면서 2023년까지 재임 기간 이루어진 주요 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보육에서 평등의 증진

학생들 간 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이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학습할 권리’ 프로그램을 통해 3세 이상 아동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수를 확충하고 만5세부터 예비 초등교육을 의무화했다.

2) 고등학교 교육의 평등을 위한 의무교육 18세 확대

2021년부터 의무교육 연한을 만16세에서 만18세로 확대하여 모든 청소년이 후기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보장하여 노동 시장에서 고용개선 효과를 기대했다.

3) 고등교육 기회 확충을 위한 대학 정원 확대

교육수준을 높이고 숙련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임기 동안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 정원을 12,500명 증원하고, 예상되는 노동 수요에 따라 기술, 경제, 컴퓨터 과학, 의료 및 사회 복지, 유아교육·보육에 가장 많은 정원을 할당하였다.

4) 대학입시제도 개혁

고등 인재 확충을 위해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진학기회 평등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했다. ‘처음 진학자 정원 할당제(first-time entrant quota system)’를 실시해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적이 없는 처음 진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했다. 아울러 기존 대입 전형의 주류를 형성한 ‘대입자격시험 + 대입 본고사’

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대입자격시험 점수로만 선발’ 전형의 모집비율을 2020년부터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입에서 교육기회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다. 싱가포르 교육개혁 사례: 미래역량함양 교육으로 전환⁴⁾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싱가포르의 인재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부국 위상을 확립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초등교육 때부터 우열반 운영으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시험성적이 인생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1위에 가려진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싱가포르 교육개혁은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시험 준비 아닌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1) ‘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s’

전면적인 교육과정 재검토를 거쳐 1997년부터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싱가포르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학생의 비판적 사고, 시민의식, 창의성 등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의 자율성 증대 및 학습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 ‘Teach Less, Learn More’

2005년에는 ‘더 적게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우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학생 중심 및 탐구 중심으로의 수업 개선을 강조하면서 시험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10-20% 감축, 교사 수업 부담 경감, 교사에게 탐구 수업 준비할 시간 제공 등을 제도화했다.

3) ‘Enhanced 21CC Framework’

2010년에 제시된 ‘21세기 역량교육 체계’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사회정서적 역량, 지적 역량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역량 중심의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

4) 싱가포르 사례에 관한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 내부보고서와 조영환(2017) 및 Tan et al.(2017)를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문장별 인용표기를 생략함.

는 인재상도 4가지로 명시하였다. 자신감 있는 사람, 자기주도적 학습자, 적극적 기여자, 의식 있는 시민이 이에 속한다. 아울러 학생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가치(예; 존중, 책임감, 청렴, 배려 등)를 강조하였고 이를 역량교육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4) ‘CCE: 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싱가포르는 21세기에 필요한 역량 함양에서 인성·시민성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도입하였고 이를 2021년에 다시 개정한 바 있다. 싱가포르의 인성교육은 국가차원, 학교차원, 교실차원 등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학교문화에 내재화되어 생활 속 인성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 배경을 가졌기에 인성·시민성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다양성 그리고 문화적 상호작용에 요구되는 스킬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라. 시사점

본 장에서 살펴본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 특별위원회는 교육개혁이 문제 상황의 정확한 진단과 추진 주체의 일관성 그리고 정권을 넘어서는 진정성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육기회 및 학업성취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교육개혁 정책이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해서 논의되고 숙성되는 과정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음도 확인하였다.

오바마 정부(민주당)는 모든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전임 G.W. 부시 대통령(공화당)의 정책 중 교육정책의 핵심인 NCLB의 원칙을 계승하면서 ESSA 등으로 변형시켜 발전시켰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들어선 바이든 정부도 전임 오바마와 부시 대통령의 교육개혁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궁극적인 목표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마다 각기 다른 지향점을 가질 수 있음에도 본 장에서 언급한 세 행정부는 중앙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개혁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핀란드 경우에서 보듯이 한 국가의 교육 목표 및 방향은 사회 전반의 요인들과 맞물려있고 한번 쇠락하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실업률이나 생산성 등 경제적 요인들과 중첩될 때 교육개혁은 의지만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OECD 최상위였던 핀란드의 학업성취수준이 2012년 이후 지금껏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 의지와 실천의 결과가 성과로 이어졌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교육을 통해 모범적으로 융화시켰다.

IV. 한국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한 교육가치 탐색

1 지속, 중단, 창조의 가치 탐색 한경구

유네스코가 발간한 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국제미래교육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며 2년여간 고민한 결과물이다. 2050년 미래를 바라보면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통해 미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양한 ‘읽기’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첫째,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셋째,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 먼저 우리 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으며 대한민국의 번영은 교육 덕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정부의 강력한 교육 기회 확대 정책, 민간의 적극적 재정 기반으로 발전한 우리 교육은 한동안 전 세계의 칭송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은 비판과 불만, 우려의 대상이며, 심지어 미래의 교육을 논하는 자리에서 ‘한국에는 그동안 입시정책만 있었지 교육정책은 없었다’고 주장이 나올 정도이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매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수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키워내는 성취를 거두었던 대한민국의 교육은 오늘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의성이 발휘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적 민주화를 다져나갈 책임감 있는 글로벌 시민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래에 대비하여 디지털, 반도체, AI 등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키워놓은 인재들이 갈 곳이 없어 야단이다. 청년 실업은 50만 명을 넘었다. 단순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급격히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노인 빈곤이 심각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고령자들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것 역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문제는 아닐지 검토해봐야 한다. 우리 사회는 노인 자살만이 아니라 청소년 자살도 심각한 문제인데,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교육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위기를 계속 강조하는 사회에서 개인들은 매우 불안하다. 생존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렵고 남과의 비교 속에서 불행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꾸만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최고 수준의 교사들을 자랑하고 있고 교원에 대한 처우도 선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예산의 측면에서도 교육청의 교육 예산은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많은 교육 전문가가 있고 학회가 있으며 연구도 많이 수행되고 있고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수많은 관료와 행정가가 있다. 그런데도 한국 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은 사실이다.

가.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미래에 계속할 기본 가치와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을 검토한다. 홍익인간(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라)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고조선의 건국이념으로 당대 사람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인본주의와 이타주의적 윤리관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현세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 거론된 후 조선시대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근대에 들어와 대종교 및 정인보 등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되살아나 해방 후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이라는 궁극적 교육 목표의 내용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1949년의 교육법 제1조로 구체화되고 약간의 자구 수정(대괄호 안에 표시)을 거쳐 1997년의 교육기본법 제2조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②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도야하고] ③자주적 생활능력과 ④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⑤민주국가[의] 발전에 봉사하며[과] ⑥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격의 도야는 개인적인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기초이며, 자주적 생활능력이란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 타인이나 공동체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이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이란 정치생활을 위한 훈련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홍익인간은 개인의 인격의 도야에서 출발하여,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고, 정치생활의 훈련 등을 기반으로 민주국가의 발전에 봉사하고 인류공동체에 공헌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한다는 것으로서, 창의, 공감, 협력, 회복탄력성 등 최근 강조되는 표현과 내용은 담고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해석을 통해 추가 가능하므로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으로서 여전히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현장에서 홍익인간은 국가의 교육 이념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게

삼⁵⁾은 『영혼 없는 사회의 교육』에서 “지난 100년 동안의 교육은 ‘식인’의 교육...”으로서 홍익인간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개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념과 현실의 괴리는 인간 사회 어디에서나 관찰되는 현상이며 중요한 것은 이념에 따라 현실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전개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부모와 젊은이들이 과거 합격과 입신출세에 노력했다고 해서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책임이 도외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었던 현대 한국의 지도자들이 부국강병을 강조하고 부모들이 입신출세나 각자도생의 생존경쟁에 열중했다고 해서 홍익인간의 이상을 무시했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범 당시 우리가 지향했던 홍익인간은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용하며 미래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해석을 통해 확장하고 보완한다면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으로 적절하다. 교육에 대한 불만과 비판과 우려가 큰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고 열정이 크기 때문이다.

나. 우리가 중단할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바라보며 교육을 혁신해야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 때문인지 제대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입시경쟁과 사교육 문제에 대한 조급하고 대중 영합적 대책의 남발 등 정책의 실패, 그리고 기득권의 유지 등 이해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분히 살펴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고 답도 어렵잖이나마 알고 있는 것 같으므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오로지 사교육을 없애고 입시부담을 경감한다는 목표를 터널 비전(Tunnel vision)식으로 추진하다가 누적된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왕조가 오백년 가까이 지속된 요인의 하나는 아무리 한계도 크고 문제도 많았지만 과거라는 사회적 상승의 사다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돈과 뺨이 없어도 능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식민지배를 받으면서도 전쟁을 겪으면서도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은 아무리 현실이 가혹하고 차별적이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고시나 서울대 입학시험은 인간 능력의 특수한 부분만 평가하는 매우 문제 많은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돈이나 인맥이 작용하지 않았다. 시험은 철저히 관리되었기에 결과에도 승복했다. 불합격하더라도

5) 이계삼(영혼없는 사회의 교육). 녹색평론사. 2009

운이 나빠서 떨어진 것이지 돈이나 인맥에 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입시지옥이라고는 했지만 불공평하다는 불만은 없었고 최고 명문대 합격에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러나 입시부담을 경감하고 사교육을 없앤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인의 공정에 대한 정서가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 본고사를 없애고 학생 전체를 하나의 시험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문제를 쉽게 내야 한다거나 교과서나 EBS에서만 출제해야 한다는 압력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단시간에 수많은 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면서 내신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시작하자 고등학교는 3년 내내 성적 경쟁의 장이 되었고 ‘내신의 불리’를 회피하려는 자퇴자가 이어졌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했다지만 재정 지원이 충분히 따르지 못하니 학생 수가 적은 지방의 고등학교는 명문 대학 보내기가 더욱 더 어려워졌다. 논술과 자기소개서 그리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문화적 자본이 명문대 진학에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여 명문대 신입생 가운데 특목고와 특정 지역 출신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소위 신뢰사회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거나 한계에 다다른 노력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쟁 자체를 포기해버린다.

지금이라도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단기간에 없애겠다는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억지 정책을 남발하는 정책 실패를 중단해야 한다. 공정에 목마르고 불신으로 가득찬 한국사회에서 소위 신뢰사회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의 무리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방랑할 기회를 억누르고 수능시험 문제를 깡그리 외워 단시간 내에 실수 없이 정답을 제시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대학 간 서열이나 전공 쏠림을 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꿈도 중단해야 한다. 정책수단의 한계와 부작용을 솔직히 인정하고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식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하여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온 근대 학교 제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교육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로이 정의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학교는 아득한 고대부터 존재했으나 근대 학교는 산업혁명 및 국민국가와 함께 발전한 것으로서,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건강한 신체, 그리고 시간과 규율을 준수하는 훌륭한 노동자와 병사,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키워낼 아버지와 어머니를 교육하였다.

근대 학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일 때 등장했으며 학교는 교육의 전부였고 졸업

은 그 끝이었다. 사회 변화나 과학기술의 진보가 빠르지 않던 시절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밀 천으로 살다가 정년과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두 배로 늘어나고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현대는 학교에서 습득한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평생학습은 취미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학교가 마치 삶의 마지막 교육 기회라도 되듯이 자신들이 보기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어떻게든 교과과정에 모두 담으려 한다. 이래서야 놀이 시간은커녕 잘 시간도 모자라게 되었다. 학교는 배우는 힘을 길러주고 잠재력을 능력으로 바꾸어주는 곳이지 정보와 지식을 머리에 쓸어담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중단해야 한다.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선생님의 지도와 감독하에서 또래들과 놀고 싸우면서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를 터득하고 성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놀이도 교육의 중요한 일부이며 특히 단체 운동 등은 신체적인 발달 외에 사회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길러주는 동시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터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 우리가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전 생애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다. 잠재력과 능력과 실력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 정의하며 평가 방법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일정 수준의 학습능력과 학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하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것을 디지털 기반으로 첨단 기술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비용과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며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초 문해력의 습득과 간단한 직업교육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은 이제 취미나 여가 수준을 넘어 매우 진지하고 심도 깊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과의 협력과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공재이자 공동재’로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교육이 공공 재원의 투입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의 방식이 협력과 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학교와 평생교육센터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는 개혁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 산

업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교육과정의 개발 등 학생들과 시민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 기업, 단체,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 메이커 스페이스나 공동 작업 공간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공간을 조성이나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봉사활동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는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을 포괄하는 세계시민교육을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에서도 심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흔히 세계시민교육 등은 앞으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나갈 학생들에게나 중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며 관계국과의 국제 이해와 협력, 교류와 소통은 한국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경험한 불행한 민족적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증진하여 평화롭고 협력적인 글로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세계시민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위기가 지속되면서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다 보니 내적 다양성과 그 표현을 억압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자칫하면 문화가 단조로워지고 창의성은 질식할 위험이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이유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750만 명의 한인의 존재나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 등 한국사회의 민족적 구성의 변화도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문화다양성교육의 심화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 시민성과 삶의 질 김거성

가. 시민성

‘시민성’⁶⁾교육은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의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⁷⁾

6) 이 글에서는 ‘시민성교육’을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시민교육’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7) <https://if-blog.tistory.com/13182>.

시민성교육과 인성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인성교육을 시민성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주의적 가치관이 왜곡되거나 시민성이 결여된 경우, 공동체와 역사 앞에서 의미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법과 제도 속의 시민성교육

1998년 3월 1일 시행된 <교육기본법>은 제2조에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교육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는 다음 세 가지이다: 인성(인격의 도야), 능력(자주적 생활 능력), 시민성(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이처럼 시민성의 확보는 교육의 중요한 지향점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⁸⁾

국제사회에서도 시민성교육이 강조된다. UNESCO의 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2050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커지는 양극화’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비판적 사고, 혁신, 개인적 혹은 공유된 목적의 실현은 인권이 존중되는 참여적 민주적 환경에서 풍성해진다”고 전제한다. 동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심각한 후퇴, 그리고 정체성 중심의 배타적 포퓰리즘 정서의 등장과 함께 인종우월주의적 이상과 광신적 애국주의가 힘을 얻으면서 다양한 정체성과의 대화 및 상호이해를 해치고 있고, 시민적, 사회적, 인간적, 환경적 권리는 두려움과 편견, 차별을 활용해 통치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해 대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들의 관심사가 선별적으로 미래의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은 건강한 민주적 시민의식, 충분한 논의의 공간, 참여의 과정, 협력적 행동, 돌봄의 관계, 그리고 공유된 미래를 장려하고 보장하는 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적극적 시민성과 민주적 참여의 능력을 형성해 줌으로써 이를 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

8)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조에서도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9) UNESCO,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유네스코,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2), pp. 42-44.

2) 시민성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이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와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 및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자질을 기르는” 것이 시민성교육의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민주주의 발전, 사회통합 기여 등을 시민성교육의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다.¹⁰⁾

따라서 시민성교육은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목적에 따르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며 발전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3) 우리나라 교육과정 속 시민성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민주시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목표에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학교 교육 목표에서는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서는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로도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며, 이는 다양한 교육 활동과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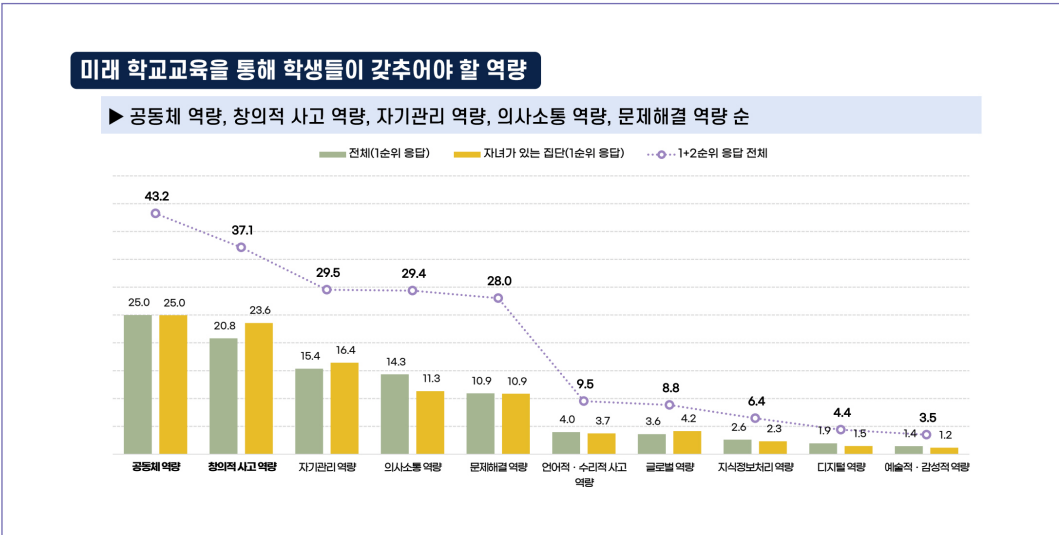
4) 시민성교육의 중요성

시민성교육은 독립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아 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공정’이 지고한 가치처럼 자리 잡고 있지만,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능력주의’가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협력과 배려가 약화되며, 약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시민성교육을 통해 공정을 넘어 ‘공감’과 ‘협력’을 실천하는 민주적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10)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ldx=1147&bcldx=189081>.

[그림 IV-2-1] 한국 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 및 미래교육에 대한 기대 조사



출처: 국가교육위원회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가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지난 2024년 2월 12일부터 2주간 동안 일반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현재 한국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 및 미래교육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의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1순위로 꼽힌 것이 ‘공동체역량’이었다. 뒤이어 2순위가 ‘창의적 사고 역량’이었다.([그림 IV-2-1] 참고)

따라서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협력, 창의와 도전”이 적절한 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마땅하다.¹¹⁾ 여기서 공동체역량은 ‘인성’이란 표현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시민성’ 개념을 따로 강조하는 것이 절실하다.

5) 시민성교육의 과제와 실천 방안

시민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① 주제별, 계기별, 참여-실천형 수업 강화

싱가포르 CCE의 ‘일관성’ 원칙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시민성 교육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체험은 인성과 시민성 함양, 사회적-정서적 웰빙의 일관된 발달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11)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중장기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제1기)의 교육비전(안)은 “창의와 도전, 공감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학습 사회”였다.

따라서 우선 주제별, 계기별 수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성과 마찬가지로 시민성교육은 현재 특별한 성취기준 등이 없다. 따라서 각 교과에서 이를 인식하고 강조하여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준법교육, 질서교육, 자율·존중·배려의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 등을 담아내어야 한다.

UNESCO 보고서나 영국의 크릭 보고서, 2022 개정교육과정 등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일부 주제들을 계기별 수업 등을 통하여 다루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교과 내, 교과 간, 교과와 창체활동 간 연계나 결합 등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주제별 통합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보거나 실천할 수 있는 방식, 또 동료들과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 일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 등도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 콘텐츠나 교수학습 사례 등의 개발과 공유를 위한 지원과 참여의 통로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② 현행 ‘도덕’, ‘사회’ 과목을 ‘도덕·철학·시민’ 과목으로 통합 검토해야

모든 교사들이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음에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시민성교육을 ‘도덕’과 ‘사회’ 과목을 통합하여 ‘도덕·철학·시민’ 과목으로 바꾸어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¹²⁾

다만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의 주제로 삼거나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공통과목인 통합사회를 시민성교육의 핵심교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성교육은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이며 동시에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원리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를 시민성이 보장되는 현장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 시민으로서 학교에서 민주적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학교에서 민주적 원리가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가지게 된다.¹³⁾ 따라서 먼저 학교가 ‘시민성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변화할 때, 진정한 시민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6) 시사점

시민성교육은 단순히 ‘공정’이란 포장으로 무한경쟁, 승자독식, 약육강식, 각자도생 등의 문제를 교묘히 합리화하는 것을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적 가치와 공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 또한 이 바탕 위에서야 가능하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교육은 이러한 “공감과 협력, 창의와 도전”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며 시민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

나. 삶의 질

학생은 지금 사람이다. 시간이 지나서야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더 성숙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런 성장이란 학생 시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지속되는 일이다. 따라서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마치 사람으로서는 무엇인가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대우하는 잘못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는 장엄한 선포는 학생들에게도 가정이나 사회, 또한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선언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지금, 여기에서’ 현실화하는 것도 교육 현장에서 마땅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즉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최고 규범에서 선포하고 있다. 학생이라고 해서 결코 그 행복추구권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8조의4)고 명시하고 있다.

12) 김원태, “교육철학 부재와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는 집단착각 - 한국교육철학회가 유·초·중등교육과정에 ‘도덕·철학·시민’ 과목 개설을 촉구하기를 바라며”, 『교사를 위한 교육철학』 2024년 한국교육철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61-64 참고.

13) 김성천 외,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만나다! -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할 것인가?』(서울: 맘에드림, 2019), p. 17.

따라서 미래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들은 무엇보다도 학생¹⁴⁾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관련하여 수렴되어야 하며, 향후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이란 관점에서 ‘과연 우리의 교육이 학생들을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모든 정책이나 제도설계나 정책 구상, 교육 현장 등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1) 학생들의 삶의 질의 현실

① 아동·청소년의 낮은 삶의 만족도

여성가족부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2017년 6.99점, 2020년 6.80점, 2023년 6.97점 수준이다(여성가족부, 2024). 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 실현이 아직도 멀고 먼 과제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그 현실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다. PISA 2015에 따르면, 만 15세를 기준으로 0에서 10 사이의 척도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6.4에 불과하였다.¹⁵⁾ 이는 다른 OECD 국가들 평균인 7.3보다 훨씬 낮고,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29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53%만 삶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OECD 평균 73%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반면 22%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4 이하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OECD 국가 학생들의 비율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OECD, 2017). 또한 그 비율은 PISA 2018에서 23%, PISA 2022에서도 22%로 나타나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향후 미래 교육의 개선 방향에서는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② 자살률

한 사회의 자살률(고의적 자해 사망률)은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삶의 조건과 사회통합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 2003년 이후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보건복지부, 2023).

특히 청소년 자살률에서도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¹⁶⁾ 2021년의 경우 12-14세는 5.0명, 15-17세는 9.5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4). 10대는 2017년(4.7명)에는 4명대였으나 2018년(5.8명)과 2019년(5.9명)에는 5명대였고, 2020년(6.5명)에는 6명대, 2021년(7.1명)에는 7명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률 평균은 10만명 당 6.0명인데, 한국은 11.7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OECD 평균보다 거의 두 배나 높다(보건복지부, 2024).

또한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비율인 ‘자살생각’ 비율은 2007년 23.7%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11~13%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12.7%로 2020년(10.9%)보다 소폭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비교 시 OECD 평균 10.7명에 비해, 한국은 24.8명(2023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더욱이 이런 높은 자살률은 청소년을 넘어서 전 연령에 걸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도 한국의 자살 사망자수는 13,978명으로 자살사망률은 27.3명이었으며, 특히 사망원인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 20대, 30대에서는 1위이고, 40대, 50대에서 2위였다.

2) 삶의 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우리나라에서는 으레 PISA 결과가 발표되면 대부분의 관심이 학생들 성적, 특히 국제 순위에 쏠리곤 한다. 반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이처럼 삶의 질에 대한 낮은 관심을 극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삶의 질은 높은 성적을 위해 양보해도 좋은가? 필자는 이런 명제가 한국 사회에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러나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교육의 목적이 마치 높은 성적 하나인 것처럼 왜곡된 교육현장을 바로 잡는 것이 미래교육 기본 가치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OECD에서 2017년 발행한 <PISA 2015 결과 제3권: 학생들의 웰빙>(PISA 2015 Results Students' Well-being)은 교육 분야에서 학업성취도를 넘어서 학생들의 삶 전반에 관심을 갖도록 획기적으로 기여한 기념비적인 결과이다.

14) 교육에서 ‘학생’이란 일반적으로 유치종교나 대학 등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본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학생’을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종교 해당 연령대의 ‘아동·청소년’과 혼용한다.

15) 만족도를 0-10점으로 나타낸 척도 가운데 7점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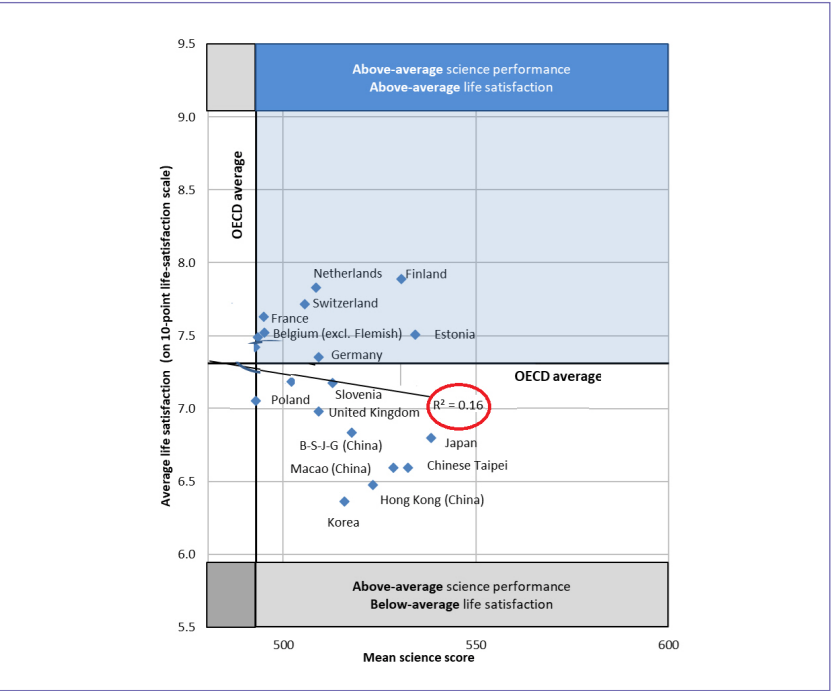
16) 여기서 청소년 자살률 지표는 해당 연령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아동·청소년 사망자 수로 나타낸다.

이 PISA 2015에서는 학업은 15세 학생들의 주요 생활 활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성취감과 삶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높은 성취도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리라는 가설은 위 보고서를 통해 입증되기 어려운 견해로 나타났다. 수학 과목의 학업성취도는 긍정적 삶의 만족도로 나타날 확률이 약간 높았지만, 독해 과목의 학업성취도는 삶의 만족도와 거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과학은 그 중간이었다. 따라서 “학업 성취도의 객관적인 지표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PISA 2015의 결론이다.

그리고 PISA 2015의 데이터는 국가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도와 평균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PISA에서의 핵심 과목별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지만,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 이상인 국가(경제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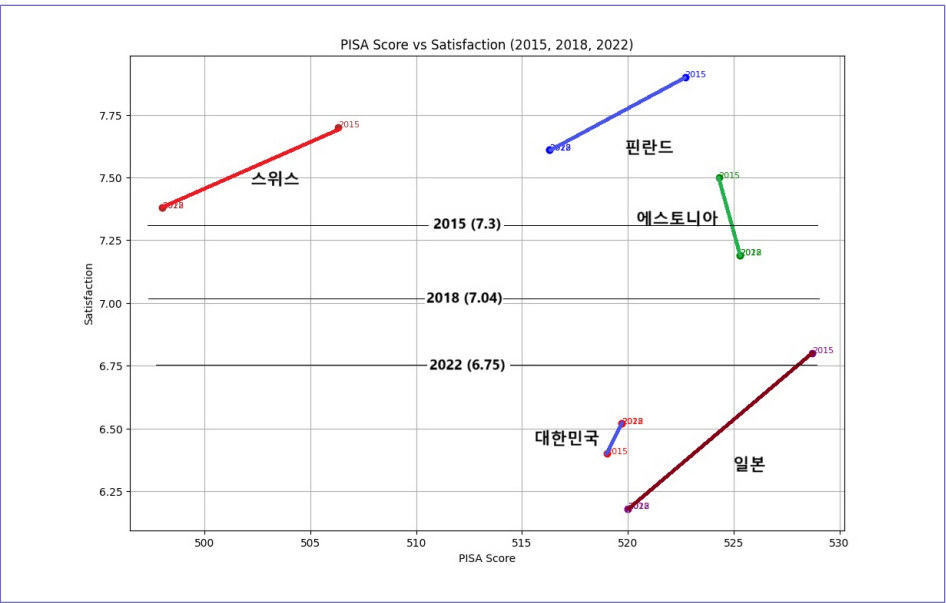
[그림 IV-2-2] PISA 2015에서 과학 학업성취도가
OECD 평균 이상인 국가(경제)들의 삶의 만족도(자료: OECD, 재가공)



우리나라의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계를 포함한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무관심은 극복되어야 마땅하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과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위스, 일본 등 5개국을 뽑아 지난 PISA 2015, 2018, 2022에서 각각의 학업성취도 조사 대상 과목인 독해, 수학, 과학 세 과목의 평균을 내어 같은 조사에서의 삶의 만족도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그림 IV-2-3] 참고). 그 결과 PISA 학업성취도 성적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큰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성적과는 다른 각국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높은 성적에 낮은 만족도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높은 성적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스위스는 성적은 약간 낮지만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그림 IV-2-3] OECD 5개국의 학생 삶의 만족도와
PISA 성적(평균) 추이(자료: OECD PISA 2015, 2018, 2022 재가공)



* 세로 직선은 PISA 연도별 OECD 회원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 수준이며 괄호 안에 그 수치를 표시하였음.

3) 결론: 학생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미래교육 비전은 마땅히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미래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저출산과 인구급감이라는

사회적 추세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교육비와 돌봄을 경감시키는 정책의 시행 등을 통해 저출생 사회의 극복이라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통제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지 그 방안들까지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제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만병통치약이 없다. 이는 다른 주제들과 서로 얽혀 있어서 교육의 어떤 한 두 가지 요소의 변화만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가정은 물론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교육청, 시민사회,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힘을 모아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일이 절실하다.

“오늘 행복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하다”¹⁸⁾는 표어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성인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지만 나중에는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기대하게 만드는 일종의 ‘희망고문’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먼저 PISA의 학생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 대부분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학생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총론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각론 수준이 아닌가 염려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국교육이 바탕으로 삼아왔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그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육 현장의 갈등·경쟁 관계를 협력·공감 중심의 관계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경쟁이나 갈등의 관계가 주도하는 현재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행복이란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생 가족, 교직원과 교직원 등의 관계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여 함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동반자 관계로 바뀌도록, 근본적으로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건강한 ‘품성’과 ‘시민성’을 갖추며 ‘공동체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경쟁보다는 상생하는 관심으로의 변화도 중요하다. 상생할 ‘이웃’의 범위를 공간적으로 확

대하면 다양성, 약자보호, 다문화, 세계시민 등의 관심으로 나타날 것이며, 시간적으로 연장해 보면 기후행동, 지구 세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민하며 실천할 것이다.

둘째로, 교수자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에서 그 누구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탄탄하게 ‘자존감’을 갖추도록 챙기는 것은 학생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들 가운데 하나다. 소명감을 가지고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찾아가도록 돕는 교사가 많아지려면, 먼저 행복교육시스템 운영자인 교사가 행복해져야 한다. 기존의 교권보호 논의를 넘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청 등에서 교사간담회를 확대 실시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교원단체들과의 단체협약 이행, 일반교사의 학교 교육과정 결정권이나 평가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은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국가 등의 법적 책무이다. 그런데 표집평가로 중3, 고2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4단계(4~1수준) 성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교과별 1수준(기초 미달)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고 따라잡기에도 실패하는 학생은 자존감이 위축되며, ‘낙오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현격하게 벌어지는 교육격차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각 학생의 개별 요구와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학습 환경과 경험을 각 학생의 고유한 요구와 선호에 맞게 조정하여 사교육 등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선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진단과 대응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육성하여 활동하게 하며,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이 필요하다.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겨냥하여 맞춤형 학습 멘토링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학력 격차와 사교육비가 큰 과목이 영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초 영어를 공교육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역량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체계화된 인공지능(AI) 및 코딩교육 등을 초·중고 과정 일부에서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식의 교육 정책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도 기본적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교사 대 학생 비율은 교육 효과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교원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에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 등 그 소수자 그 누구도 ‘실패자’나 ‘낙오자’가

17) 저출생사회의 극복 또한 한 두 가지 만병통치약이 없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육아와 사교육비 등 양육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과 경쟁압력 등의 요소를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0997&menuNo=201106>) 이와 비슷하게 OECD 윌렘 아데마 수석연구원은 장시간 노동문화, 출산과 육아의 부담,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등을 이유로 들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5919>)

18)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52>.

되지 않고 탄탄하게 ‘자존감’을 갖추도록 챙기는 것은 학생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들 가운데 하나다. 중기적으로는 인공지능시대에 걸맞게 이를 활용하여 개인적 맞춤형 교육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방향이다.

이와 같은 맞춤형 교육은 우선적으로 특수교육에서 모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특수학교와 학급의 증설과 과밀학급의 해소, 전공과 확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특수교사 정원 확충과 교육여건의 개선 등으로 특수교육의 양적 질적 고양이 필요하다.

셋째로, 학생들을 교과 성적 등 한두 가지 요소로 평가하여 서열화하는 체계를 극복하고, 학생 주도로 자존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능력과 관심, 꿈이나 끼를 살려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에게 지식이나 기능만 채워 산업 인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교육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 이웃과의 관계, 세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 등 전인적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파편적인 지식이나 암기력 중심의 성적 매기기를 그치고 창조성, 상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중시하여 사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환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어떤 시와 관련한 국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정작 그 시인은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향후 한국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까를 설명하는 좋은 사례로 삼아야 한다.¹⁹⁾

이제 일생 동안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하는 물음과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학습 내용이 과연 얼마나 깊이 관계되어 있는가 묻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 학습 의지, 학습 주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학습 효과와 학생의 역량 강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생활, 현실과 관련된 주제들을 각 과목의 학습에 연계하는 계기별 교육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사고의 바탕 위에서 앞으로는 입시 제도, 나아가 회사나 공공 부문 등의 인력충원제도 등을 다시 그리도록 협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한국 교육의 한 두 가지 요소의 개혁이 아니라 총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지속적 노력이 절실하다.

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04/2010050402475.html

3 교육자치가 지향하는 가치 박웅수

격동의 세월을 경험한 대한민국에서 교육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양적, 질적 교육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성이 유지된 교육 가치의 대표적인 것이 교육자치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한 지향 가치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기본 가치이기도 하다. 이 가치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역시나 중요시될 기본 가치임에 이론은 없어 보인다. 헌법 제31조²⁰⁾ 4항이 선언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그것이다. 이는 헌법적 가치이므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의 지향 가치로 존중될 것이고 실천 노력 또한 경주될 것이다. 이는 합의된 국민적 정서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국가 교육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1945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유효한 교육의 기본 가치이자 국가 교육정책이었으며, 그러한 가치의 대표적 실천 도구 또는 방법이 교육자치였다.

따라서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관통할 교육의 지향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충실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교육의 기본 가치 탐색을 위한 과정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교육자치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 거버넌스, 교육재정 등 교육 및 교육행정 전 영역에서 강조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특성상 교육감 선거는 바로 교육자치(교육감선거=교육자치)로 직결되는 정서를 고려한다면, 교육자치의 지향 가치에 부응하는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 모색은 교육 지향 가치의 현실적 탐색 과정으로도 여겨볼 만하다.

가. 교육자치 탄생의 연원

1949년 교육법 제정 시부터 법령상으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있는 교육자치제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1991년까지는 그 시행이 유보되는 꽤 긴 기간의 과도기를 거쳤다. 제2공화국 기간을 제외한 유보 기간에는 교육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게끔 했다. 마침내 1991년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교육자치도 명실상부하게 도입·시행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운영 형태와 유사하게 교육자치도 운영되었다.

20)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교육자치 체제는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이 있고 심의·의결 기구로 의회가 있는 형태이다. 하나의 의회지만, 집행기관만은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형식이다. 교육감을 임명·제청하는 방식은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되었으나, 특별·광역 지역에서 교육·학예를 대표하는 집행 기구는 한결같이 교육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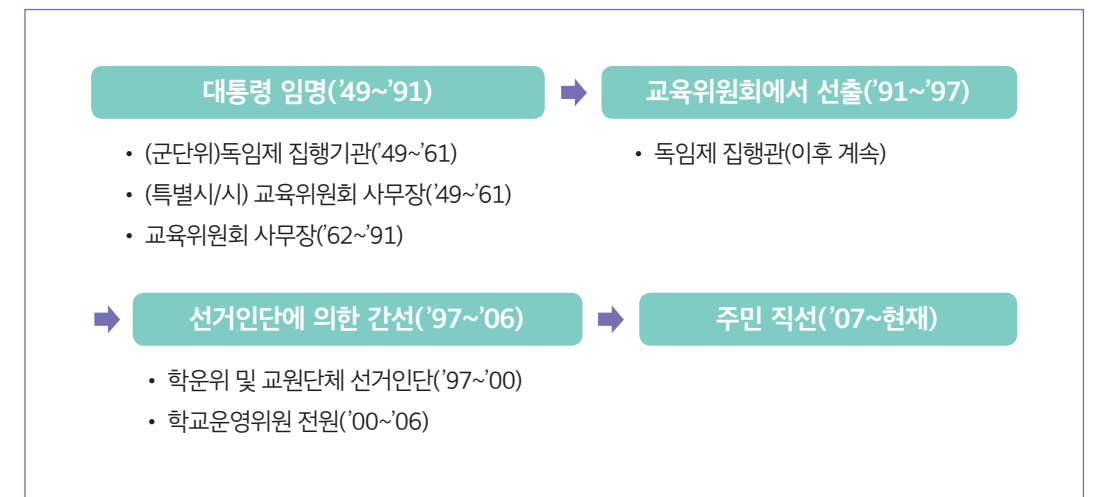
교육자치는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여 운영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인 교육부로부터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체적으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중앙부처인 교육부로부터 독립하여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의 교육행정을 운영하면서도, 해당 지역에서는 일반행정기구인 시청이나 도청과 별개로 독립적인 교육청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을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집행하게끔 하는 형태다.

이는 해방 후, 미군정청 하에서부터 제도화된 것으로 미국의 독특하고도 자생적인 상향적(Bottom-up) 교육자치제도²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전문성을 존중하려는 의도로 일반 자치로부터 구분되고 정치적으로도 독립된 교육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둔 것이다.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된 교육행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 장치가 교육·학예를 대표하는 교육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자치 연혁은 교육감 선출 방법의 변천사라 하겠다. 교육자치제가 시작된 1991년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였고 1991년 이후에는 교육자치의 시행으로 다양한 주체가 교육감을 선출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시·도의회와는 별개이지만, 특별 상임위원회 형식으로 구성된 주민 직선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출했다. 그러나 이 제도로는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의 반영이 어렵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 선거인단이 교육감을 선출하게

했다. 이 또한 이해관계자인 교사들이 교육감 선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원단체를 배제하고 오로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만이 선거인단이 되어 교육감을 선출하게 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선거인단이 학부모로만 제한되고 그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로 다시 제한되어 자치제도의 주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복원하고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시·도의회와의 이중 통제 및 중복의 이유로 별도로 있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의회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한 개의 시·도의회와 두 개의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시장·도지사가 있다. 현재 의원, 군수, 구청장, 시장,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 모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그림 IV-3-1] 교육감 선출제도 연혁 요약



출처: 박용수, 2021, 공짜 없는 세상의 정의로운 사회다 p.269

21) 미국의 지방교육자치는 주 단위인 State와 지역 학교구 단위인 Local School District 단위에서 이루어진다(2023년 기준, 13,318 개의 Local School District가 있음). 그러나 주 단위의 교육자치는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학교구 단위의 교육자치는 200년 역사의 자생적 제도지만 미국 전역에서도 통일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교육자치가 운영되는 단위는 Local School District이며, 지역 학교구 단위에서의 교육자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주민이 직선하는 교육위원과 그들이 고용하여 교육행정을 집행케 하는 교육감의 형태가 미국 교육자치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지금 우리 교육자치는 법률로 만들어진 하향적(Top-down) 방식으로 미국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감만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우리는 광역 지역에서의 집행기관에, 미국은 기초 지역 단위에서의 심의·의결기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양국 간에 교육자치 내용이 확연히 다른 점이다.

https://nces.ed.gov/programs/digest/d23/tables/dt23_214.10.asp 2025. 2. 27. 인출

나. 헌법 정신에 기초한 교육자치의 기본 가치와 방향

1945년 해방 이후 설치된 미군정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이미 핵심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교육자치제의 실시 계획이었다. 이는 당시 문교부장이었고, 이후 문교부 장관을 했던 오천석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한국 교육을 민주주의 초석 위에서 출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미군정청부터 교육정책을 성안한 오천석은 그의 책에서 교육자치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교육자치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첫째로, 교육에 대한 국민의 발언권을 보장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의한 독재를 막으려는 노력인 까닭이요, 둘째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과 정치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인 까닭이다”(오천석, 2014: 409).

이러한 노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2장에 교육자치에 관한 상세한 규정으로 반영되었다. 제1장은 “총칙”이고 제2장이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인 것을 보면 교육자치에 대해 얼마나 정책적 관심도가 높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교육자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헌 헌법(1948년)은 제16조에 교육에 관한 규정과 함께 제96-97조에 총괄적인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담았고, 9차 개정을 거쳐 현행 헌법에는 제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이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정치적 편향성을 금지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하고 강력한 헌법 조항이다.

이러한 교육자치의 역사적, 법적 연원을 종합해 쉽게 풀이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중앙집권적인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로부터 탈피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주민자치 원리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지방자치를 시행한다.
- 지방자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자치도 함께 시행한다.
- 이는 일반 지방자치가 태생적으로 정치적 성향과 정당에 기반하므로 정치적 휘둘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비정치적 교육행정기관을 상정하는 교육자치를 일반 지방자치와 별개로 운영함을 의미한다.
- 따라서, 교육자치는 중앙정부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자치의 두 가지 의의와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 교육·학예를 담당하는 교육감과 그 외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시장·도지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있는 형태이다.

다. 교육자치가 지향하는 방향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기반하여 교육자치가 지향하는 방향이나 가치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자치와 자주성이다. 이는 지방자치를 교육에도 적용한다는 의미와 일반 지방자치와 별개로 교육자치를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시행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1991년 ‘지방자치법’에 의해 일반 지방행정의 자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로 교육자치를 시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지방자치법 제1조), 교육자치는 이에 더하여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 따라서 일반 지방행정 자치와 교육행정 자치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이다.

두 번째는 교육의 전문성이다. 현대 교육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에 의한 교육을 의미하므로 그 교육행정을 관장하는 교육자치도 태생적으로 전문성을 존중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연유로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한다.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얹혀 시행하면서 당시 차기 선거인 2014년부터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없애는 것으로 입법하였으나,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자 사태²²⁾로 곧바로 법률 재개정으로 복원되었다.

세 번째는 주민 자치성이다. 1991년 교육자치가 시작될 때는 교육감 선거는 다른 일반자치 선거와는 달리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간선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간선제도 그 방법이 여러 차례 변경되다가, 결국에는 주민자치의 기본 정신을 교육자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부터 주민직선제로 변경되고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다른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이는 교육감 선출 방법에 있어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려는 간선제가 오히려 주민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육계나 학부모만의 짬짬이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따라 주민자치와 주민통제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명분에 따라 교육감 간선제가 주민직선제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교육자치도 주민 자치성에 충실해야 한다는 근본적 원칙에로의 회귀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인 등도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도 정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교육감 선거는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따라서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22) 2014년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친딸이 ‘교육감 자격이 없다’라며 올린 폭로 글로 촉발된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보직을 유지하겠다는 아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에 완주했으나 초기의 압도적 지지와 달리 낙선했다.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1703051> 2025. 3. 6. 인출

라. 교육자치의 점검·평가를 통한 향후 과제

1) 교육자치의 점검·평가

먼저, 교육자치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지사와는 별개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도청과 별개로 교육청이 존재하고 그 기관장인 교육감이 존재하고 조직과 재정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므로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시·도의회와 시·도지사의 소속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진영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지만, 교육감과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재정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라고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교육감 후보자는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만 있으면 입후보할 수 있다. 주민직선제의 현 제도하에서 후보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도 주민 직선인 현 체제하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감 후보자의 3년의 경력만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토론을 보면 교육 전문가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이를 대변한다. 시·도청이 아닌 별도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이 학교와 교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제도적 장치가 오히려 교육자치를 통해 교육 전문성을 보호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일 수도 있다.

세 번째 지향 가치는 주민 자치성이다. 2026년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얹혀 시행된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되는 해가 된다. 민의를 국민에게 직접 묻고자 해서 주민직선제를 채택하여 4번이나 시행하지만, 국민의 관심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선거가 함께 시행되기 전까지 3년간 단독으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낮게는 10%대였고, 최대도 20%대였다. 2024년 10·16 및 2025년 4·2 재·보궐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과 시민의 무관심이 다시금 확인됐다. 일반 정치 선거의 투표율이 최고 70.1%였던 반면, 서울교육감 선거는 23.5%, 부산교육감 선거는 22.8%에 불과해 국민 대다수가 투표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선거가 교육감 선거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주민 자치성이 철저히 외면되고 무시되는 선거가 교육자치의 상징이랄 수 있는 교육감 선거임이 숫자로도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교육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정작 시민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고, 사실 무관심하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법률상 교육감 후보자가 당시에 정당인이 아니면 되고, 정당은 공식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관여행위만을 하지 않으면 모든 유사 정치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교육감 선거의 실상이다. 교육감 선거는 거대 여야 정당의 뒷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고, 과거 유력 정치인들이 교육감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도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다. 이념 성향에 따라 거대 여야 정당과 이면으로 제후하지 않으면 당선될 수 없는 것도 교육감 선거다. 결론적으로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도 이미 형해화되었다.

2) 교육 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의 향후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시민들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교육감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시민이 주체가 되어 선거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정당 및 정치 선거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얹혀 시행하는 관계로 후보자 개인 중심의 교육감 선거만으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치 선거와 그 세력에 밀리고 가려 교육감 선거는 항상 관심 밖이었다. 지난 16년 간의 교육감 선거 과정과 결과가 이를 설명한다. 자치, 자주,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로 거듭날 필요가 절실하다.

현재의 교육감 선거에는 깜깜이 선거, 무관심 선거, 진영 선거, 단일화 선거, 뒷배 선거 등 부정적인 수식어가 즐비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고려해 볼 만하다.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교육이 선거의 중심이 되게 하며 앞뒤 안 가리는 단일화 제일주의 선거를 극복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교육감 후보자들 간에 공약과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제도면 좋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의 결선투표제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과반 득표가 없는 지역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일정 기간 내에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다시금 하게 하는 것이다.

극단적이고 타협 없는 진영 대결에서의 단일화 폐해를 예방하고, 다른 정치 선거에 의해 매몰된 교육감 선거를 결선 투표를 통해서 시민의 교육감 선거에 관한 관심을 환기해 교육감 선거를 민주주의 꽃으로 복원시킬 수도 있다. 다른 정치 선거와 달리 결선 투표가 도입되는 교육감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실천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결선 투표까지의 기간에는 집중적이고도 전문적인 교육에 관한 생산적인 토론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하

면 교육감 선거는 진정한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자치를 통해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의 기본 가치를 회복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의 가치 지향 양희준

가. 교육 가치의 2중 구조

표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홍익인간’ -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 이며, 이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곧 ‘공존’, ‘공익’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 이념 아래 개개인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공영’ 등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표방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추구되는 교육의 목표는 ‘성적의 향상’, ‘상급학교 진학’ 등인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결과는 많은 학교들에서 ‘실적’이라고 불리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는 것이 곧 교육 목표의 달성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즉, 일선 학교에서 추구되는 교육 목표는 표리부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기도 하다. 어느 한 쪽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한 쪽을 가로막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교육 가치의 2중 구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나. 지방소멸과 인재유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20세~39세의 여성의 수를 분자로 하고, 65세 이상 주민 수를 분모로 하는 ‘지방소멸지수’가 0.5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2015년에 80개 기초지자체에 불과하던 것이 2024년에는 130개로 늘어났다. 전국 기초지자체의 60% 가까운 수가 ‘소멸위험지역’이 된 것이다.

지방소멸 현상이 교육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나타난다.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해당 지역의 저출생이고, 다른 하나는 상급학교 진학에 즈음하여 당연한 듯 이루어지는 학생 유출이다. 저출생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의 대

책이 오래전부터 모색되었지만, 지방의 학생 유출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듯하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오랜 격언은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정언명령(定言命令)이 된 지 오래다. 겉으로 표방하는 가치와 실제로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반대의 방향을 향하는 ‘가치의 2중 구조’가 여기서도 발견된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자주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지만, 그와 동시에 인재를 서울로, 도시로 보냄으로써 지방의 활력과 지속성을 축내는 ‘인재 유출’은 ‘지방 소멸’을 부채질해 왔다.

다.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

지방의 학생 수 감소를 포함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의 도정 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가치의 2중 구조’를 극복하고 교육의 기본 가치를 새롭게 해야 한다. 미래의 교육은 새로운 기본 가치에 맞춰 설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여러 관점에서 여러 가치가 제안될 수 있겠으나 지방소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는 관점에서 미래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를 제시하자면 ‘공존’,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미래교육은 ‘공존’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 지방의 관점에서 ‘공존’의 가치는 ‘수도권’(중심부)만 살 것이 아니라 ‘지방’(주변부)도 함께 살기 위해 반드시 추구되어야만 하는 가치이다. 수도권을 위해 지방이 희생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지방이 살기 위해 수도권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기 위한 방향에서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곧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성’의 가치이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세계는 ‘번영’이라는 가치를 줄곧 추구해 왔다. 그것이 ‘WTO 체제’ 등 세계 경제 질서를 현재와 같이 형성해 왔다. 그러나 국가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번영을 추구했던 수십 년 간의 노력은 부와 인구의 집중과 양극화를 야기했다. 이제는 무제한의 ‘번영’ 추구를 멈추고 새로운 가치로서 ‘지속가능성’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제한의 ‘육망 추구’를 멈추는 사회적, 제도적 ‘결단’을 요청한다.

셋째, ‘다양성’의 가치이다. 지방소멸이 가져올 가장 큰 재앙은 다양성의 소멸이다. 어떤 점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간과하고 무시해 온 결과가 우리 시대에 ‘지방소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얼핏 도시화와 상업화가 내포한 통일성이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져올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착각이다. 무분별한 자연 개발이 정체 불명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가져왔듯이, 지방이 몰락하고 모두가 중심부로의 이동을 추구하는 획일화 즉, 다양성의 상실은 우리 사회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

‘공존’, ‘지속가능성’, ‘다양성’을 교육의 기본 가치로 추구하는 일은 교육 가치의 2중 구조 속에서 실제로 추구해 왔던 오랜 가치들을 폐기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오랜 가치들이란 곧 ‘경쟁에서의 승자독식’이고, ‘욕망의 무제한적 추구’이며, ‘속도’이고 ‘효율성’이다. 우리 사회가 가지는 강력한 ‘경로의존성’ 때문에 미래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일은 상당한 정도의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멸’을 막을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대전환시대”라는 인식에 상응하는 ‘실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5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 정미라

이 글에서는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기본 가치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학교 현장의 문제점 진단

현재 학교 현장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정미경 외(2016)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각 교육 주체들이 겪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미래교육의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이다. 이처럼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 학생 관련

현재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획일화된 대입 준비 교육은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EBS 수능 연계 교재 중심의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보다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만들며, 이는 공교육의 위상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 교육과 사교육 간의 불균형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떨어뜨리고, 학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교육 환경은 사회성 함양이라는 중요한 교육 목표를 간과하게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이 또래와의 관계 형성, 협력, 소통 등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하며, 이는 결국 전인적 인간 육성을 저해한다. 사회성 함양의 부재는 학업 중도 포기 학생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는 개인적인 학습 기회 손실을 넘어 공교육 불신을 심화시키고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확산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교육시스템이 사회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경쟁 압력을 가중하여 전인적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오직 성적만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분위기는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탐색하기보다는 단순히 좋은 점수를 얻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본질적인 의욕을 상실하고, 자신의 진정한 흥미와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잃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학업 성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경쟁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들어 폭력, 왕따, 자해 등의 문제에 노출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증, 불안 장애, 심지어 자살 시도와 같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도 늘어난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적인 성취를 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이다.

2) 교사 관련

현재 교육 현장의 과도한 대입 경쟁 체제는 교사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 이러한 경쟁 환경은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어렵게 하고, 교수 효능감을 저해하며 교육 효과성을 감소시킨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집중하기보다 입시라는 목표 아래 정해진 교육 과정에 얽매인다.

특히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교사들은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보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관리, 자습 감독, 급식 지도와 같은 학생 관리 및 생활 지도 업무에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한다. 대입의 중요한 요소인 학생부는 교사들에게 엄청난 행정 부담을 지워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는다. 행정 업무에 치중하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개발할 기회가 축소되어, 새로운 교수법 연구나 창의적 수업 개발보다 입시 중심의 틀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저하시키고, 이는 다시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직무 만족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교사들은 노력에 비해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좌절감을 경험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사들이 학생, 학부모, 심지어 학교 행정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건강한 교육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에 큰 걸림돌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교직 사회의 어려움은 높은 이직률 및 명예퇴직 증가를 초래하여 교육 현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숙련된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면서 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신규 교사의 빠른 소진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고, 미래 인재 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학부모 관련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은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불신은 소통 단절을 초래하며 교육 효과를 저해한다. 일부의 학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공유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이는 학교가 근거 없는 비방에 시달리게 만든다. 더 나아가, 과도한 민원 제기는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과도한 양육 경쟁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쟁은 자녀에게 심각한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입시 위주의 사고방식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간과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을 억압한다. 이는 학생들이 개별적인 흥미와 적성을 발현할 기회를 박탈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필요한 다면적인 인재 양성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경쟁적 분위기는 학부모들이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을 심화시킨다.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가계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만이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를 확대시키고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사회 전체의 교육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부모의 사교육 지출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교육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사교육 관련

오늘날 사교육 시장은 단순한 학업 보충을 넘어 대형화 및 전국화 추세를 보인다. 심지어 교사들조차 자녀 대입 준비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정도로, 사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다양한 교육적·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대형 사교육 기관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교육 상품을 제공한다. 이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을 확산시킨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학습 자료와 교수법을 적용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맞춤형 성장을 지원해야 할 공교육의 역할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이러한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보다, 단편적인 지식 암기와 점수 향상에만 치중하게 한다.

더욱이 일부 사교육 기관들은 가격을 담합하여 높은 교육비를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를 자행한다. 이는 학부모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높은 사교육비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제한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확대시킨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질이 결정되는 현상은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교육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교육 기관들은 입시 관련 가짜 정보를 유포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와 결합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보 유포는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 선택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는 등 교육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 학생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흥미와 적성을 찾기 어려워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학습 동기 저하와 진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은 다음과 같은 기본 가치와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가치

첫째, 민주의 가치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행사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민주적 가치와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공동체로 기능해야 한다. 학생들은 획일적인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키워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증진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민주 시민 성장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장려하는 민주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학부모 또한 학교의 민주적 운영에 참여하고 가정에서도 민주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녀와 대화하며 민주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준다.

둘째, 공존의 가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타인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 봉사활동,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제공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르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지도한다. 학부모는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타인 존중, 배려, 나눔의 가치를 가르치고, 학교의 공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협력한다.

셋째, 창의의 가치는 교육 공동체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단순히 지식 암기를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자유로운 탐구와 실험을 장려하며, 메이커 교육, 코딩 교육, 예술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도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성장을 촉진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넷째, 초월의 가치는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기존의 소통 방식은 갈등을 심화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서 먼저 과거의 낡은 틀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제시한다. 교육은 학생들이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학습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자세를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편협한 시각을 지양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포용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길러준다.

2) 미래교육의 방향

① 학생 중심 교육: 개성과 잠재력 존중

미래교육은 학생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획일화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흥미, 적성, 학습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개별화된 학습 경로 제공,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및 토론 중심 수업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경험을 중요시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역량을 기른다.

② 교사의 전문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환경 조성

미래교육의 성공은 교사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 교사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필요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양성 과정의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예비 교사를 배출하고, 현직 교사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자 심리 이해 등 미래교육에 필수적인 분야의 연수를 의무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도한 행정 업무를 경감하여 교사들이 교수 및 학습 지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③ 학부모와의 협력: 교육 공동체로서의 상생 문화 조성

미래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이 아닌,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활동 활성화, 학교 교육 설명회 및 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교육의 방향과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 시너지를 창출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④ 공교육 강화: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유연화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선택 과목을 확대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을 지원하고 학습 부족을 보완하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인다. 나아가, 사교육

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여 학교 시설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교원 확보에 힘써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도록 한다.

⑤ 미래 사회 대비 역량 함양: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미래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을 포함하는 핵심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융합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화하여 학생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인성 교육과 시민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역량 중심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다. 미래교육을 향하며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학교 교육은 현재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획일화된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 저하와 전인적 성장 방해를 초래하며, 사교육 의존도 심화로 공교육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또한, 과도한 행정 업무와 대입 경쟁은 교사들의 전문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학부모의 학교 불신 및 과도한 사교육 경쟁은 교육 생태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 교육 강화, 교사의 전문성 제고,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협력, 공교육의 질적 향상, 그리고 미래 사회 대비 역량 함양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교육 과정의 개선을 넘어, 민주, 공존, 창의, 초월의 기본 가치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림으로써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미래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고,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며, 학부모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에 참여하고, 공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우리 교육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진정한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V.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1 사회개혁으로서의 교육문제 해결방법 김동춘

과거나 현재나 한국 교육개혁의 목표와 과제는 변함이 없다. 그 첫째는 학생들을 입시, 공부에서 해방시켜 행복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다. 둘째는 소득(재산)과 학력의 상관 고리 차단해서 교육이 계층과 계급 재생산의 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출발선에 선 학생들의 교육조건 격차를 축소해야 하는 일이다. 셋째는 미래의 국가. 사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일이다. 성적이 최고로 우수한 학생들 거의 전원이 의대/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는 현상이다. 미래 산업구조, 사회변화, 특히 다가온 AI 시대,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일자리 문제, 노동 수요에 부응해야 하며, 학교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교육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기본 전제는 ‘교육’ 문제와 ‘교육연관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교육’문제라 하는 것은 학교, 학생, 교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주로 학교의 수업, 교과과정, 기초학습 능력 배양, 학생평가, 입시, 학교폭력, 교사에 대한 대우, 교원 육성, 교육재정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 문제는 교육연관 문제의 틀 속에 있으며, 교육연관 문제는 입시, 사교육, 대학 서열화, 탈학교 학생, 디지털 AI 환경과 교육 등으로 나타난다. 교육문제는 넓은 의미의 교육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경제·노동문제이자 계층계급 문제이기도 하다. 즉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력 수요구조의 변화, 한국의 조건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의 학교와 학생 문제, 수도권 집중 시대의 지방의 학교 학생, 지역사회와 학교의 관계 문제 등이다. 한국에서는 교육연관 문제가 입시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교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본 장에서는 ‘시험능력주의’라고 개념화하여 서술한다. 한국은 능력주의 사회이나 시험성적 우수한 자를 곧 능력 있는 자로 보고, 이러한 능력주의자를 기르기 위해 모든 사적·공적 에너지와 자원이 투입되며,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권력과 부를 몰아주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러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을 배제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 시험능력주의가 학교, 학생, 교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하려는 교사는 좌절하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나 호기심은 억압되고, 학부모들은 과도한 부담에 허덕인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능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체제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제도에 대한 의식 차원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동안의 교육정책은 주로 입시정책에 초점을 두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입시는 시험능력주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며,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하고 공정의 원칙을 살려서 대학 시험이나 내신 평가에 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승복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변별력은 결코 교육이 될 수 없다. 대학입시는 대학서열의 산물이며, 대학서열의 강화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이중화, 계급·계층질서의 고착화, 권력의 심각한 불균등한 배분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이 지배하고, 대학은 대학 밖의 노동시장과 권력구조가 지배한다. 교육문제를 교육연관문제로 봐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민주시민교육을 아무리 주창해도 현재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대학입시라는 관문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교육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대학개혁과 사회개혁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물론 초·중등 학교의 교육개혁은 대안 학교, 혁신학교, 수업혁신 시도 운동처럼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문제의 큰 줄기를 건드리지는 못한다고 본다. 초·중등 학교의 개혁은 결국 교육과정을 개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영·수 중심의 교과와 시간 편성의 제한이 있지만,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그에 따라 수업이나 입시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개혁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의 입시-대학서열 체제 하에서 교육과정의 근본적 개혁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교육자치 확대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교육과정 통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 단위학교, 교사가 편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비율, 독자적인 교과서나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나가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지역사회를 공부하고, 지역사회의 주민인 학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학교에 끌어들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교육의 내용이 훨씬 풍부해질 것이며 학생들도 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참여의 필요성, 각종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 사교육의 공교육 지배, 수능의 퍼즐화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대학입시에 있으나, 고등학교 교육은 사회적 수요에 맞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과도한 대학진학열, 특히 명문대와 의대 진학의 열망을 낮추는 일인데, 명문대학 대학졸업장이 사회적 신분처럼 되어 있고, 학벌 학력이 지배하는 한국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내실화(현재의 특성화고 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직업 위탁고의 비중 확대), 전문대의 무상화, 폴리텍 대학의 질 향상과 취업 연계 강화, 기업에서의 숙련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고졸-대졸의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여, 대학진학의 유인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 대학이 바뀌어야 초·중등 교육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존의 대학서열을 완화하는 것이다. 서열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으나 지방의 국공립대학의 질 향상, 지방 사립대학의 공영화와 통합 네트워크 강화, 지방대 출신의 지방 공기업 취업의 가산점 제도의 강화 등으로 서열을 완화하며 특히 높은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도입된 반값등록금 제도를 개선하고, 그 재원으로 지방 국립대 등록금의 무상화로 점차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대학 정원 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대학과 주변 지역사회, 기업들과의 협동과 연계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의 대학원, 특히 우수한 이공계 박사인력을 양성하여 기업들이 지방에 머물 유인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대학 육성은 사실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이 초점이 두어야 하며, 우수한 교수들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수의 보수체제도 유연하게 해야 하며, 교수들의 이동도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연구재단이 시행하는 국가박사 제도를 확대하여 인문사회계열 박사들은 지방대학의 연구소에 소속하여 지역조사, 지역문화 진흥, 그리고 지역 시민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들을 획일적으로 논문 제조기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지역사회의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면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입의 유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중심의 과잉 집중, 교육경쟁, 학생 스트레스, 사교육은 모두 하나의 현상이며, 지방의 일자리, 교육 문화 인프라 등과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는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의 질적인 향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부는 성적에 맞추어 가는 추세이고, 서열 구조 상위의 대학은 학부 교육에 신경 쓸 유인이 없으나 대학원은 다르다. 대학원의 질 향상은 진정한 교육의 질 향상이며, 국내의 학문 발전뿐만 아니라 학문과 과학기술, 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 간의 직접적인 연계고리 강화, 그리고 외국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입지는 국내 대학원의 질적인 향상과도 직접 상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 지배구조 문제, 대학원, 연구 등은 더 전문적인 의제이므로 본 장에서는 생략하겠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정책안이 없거나 아이디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체, 특히 이 문제를 일관되게 추진할 정치적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교육 전문가이나, 오직 자기 자식이 학생일 때만 과도한 전문가이고, 엘리트들은 자신이 겪은 입시와 교육경험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언론이나 엘리트 집단은 능력주의와 경제주의를 신성시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특히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정책정당이 형성될 수 없는 현재의 정치구도 하에서 교육 의제가 국가의 중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기 어렵다. 성장주의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국가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다. 단기적인 선거 승리에 사활을 거는 한국의 정치체제 하에서 교육은 언제나 부차적인 의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교육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교사, 교수들이 주체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전교조나 교사노조가 교사의 직업적 이해보다는 교육 일반, 특히 교육연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대학과 노동시장 조건, 한국의 정치적 지배 질서에 대해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야를 갖고 접근해야 다양한 사회 각층을 설득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녀 교육문제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당사자는 공적인 교육주체가 되기는 적절하지 못하며, 교육 관료, 정치권은 자신의 이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육개혁의 주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교사들 역시 매우 지쳐있고, 교직 탈출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소신을 갖고 가르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 모두를 위한 교육: 교권, 학습권, 보편적 학습 설계 정원화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담당 분야 관련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으로서, 소속 위원은 현장 애로사항을 찾아 그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은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아울러 실현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위원회로서, 이번 장에서는 교육 정책을 직접 실현하는 주체인 현장 교사의 시각에서 지금 유초중등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거시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미래 교육에 관한 방향과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대전환시대와 미래교육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기존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통하기 어려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가치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처 능력, 융합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창의성, 세계시민 역량 등이 있을 것이며,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에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 기본 가치와 방향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의해 ①인격 도야, ②자주적 생활능력 함양, ③민주시민

자질 함양의 세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다. 1997년에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는 교육이념이지만, 이는 현장 교사의 시각에서 볼 때 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전환시대의 미래교육을 위해 필요한 본질적 가치에 해당한다.

● 교육의 양면적 속성

‘대전환-미래’와 ‘기본 가치-방향’의 상반성과 동질성이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실현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교육의 기본 가치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유동성과 다양성이 증가해 가는데, 다양한 개인과 어울려 사회를 구성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적 가치다.

● 다양성을 존중하는 보편적 공교육

교육기본법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존중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미래사회에 필요하다.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인 민주시민교육(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으며 어울려 사는 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이러한 가치를 분명히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유초중등 교육 환경은 학생들이 이러한 역량을 쌓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크게 다음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가. 교사의 가르칠 권리: 교권 부재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최대 30만 명의 교사가 결집한 교사 집회가 매주 개최되었으며, 집회의 핵심 문구는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였다. 이는 현장에서 교사는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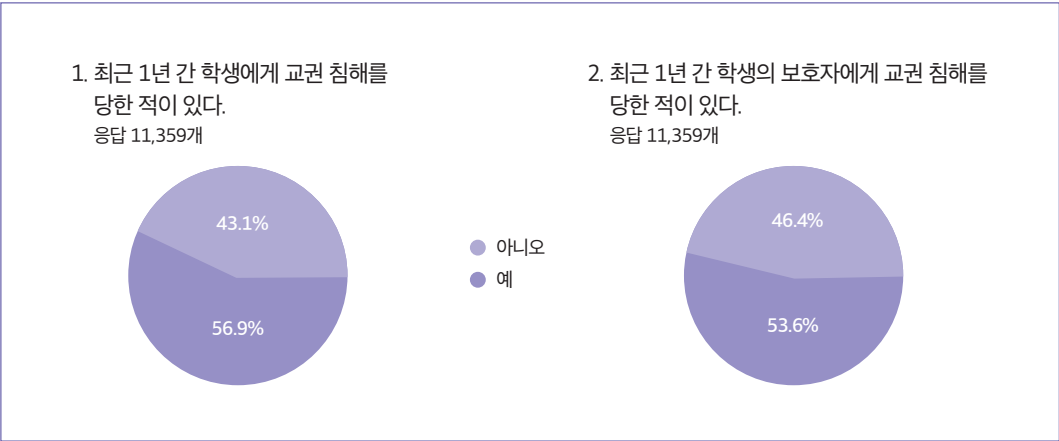
교사노동조합연맹의 2022 설문조사에서 전국 교사의 77.6%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질문의 응답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 반복된 주요 키워드는 ‘아동학대’, ‘악성 민원’, ‘관리자 방관’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2023년 교사 집회에서도 정확히 반복 지적되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남용 등,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법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 끝에 교권 4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2024년 교사노조연맹 스승의 날 기념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57%)·학부모(53.6%)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민주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교사에게는 과도한 법적 의무가 있으나 학생을 교육적 판단에 따라 지도할 권리가 부족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많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협조할 권리가 지워지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 세태는 민주시민교육의 약화뿐 아니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의 문제 역시 부르고 있다.

[그림 V-2-1]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 스승의 날 기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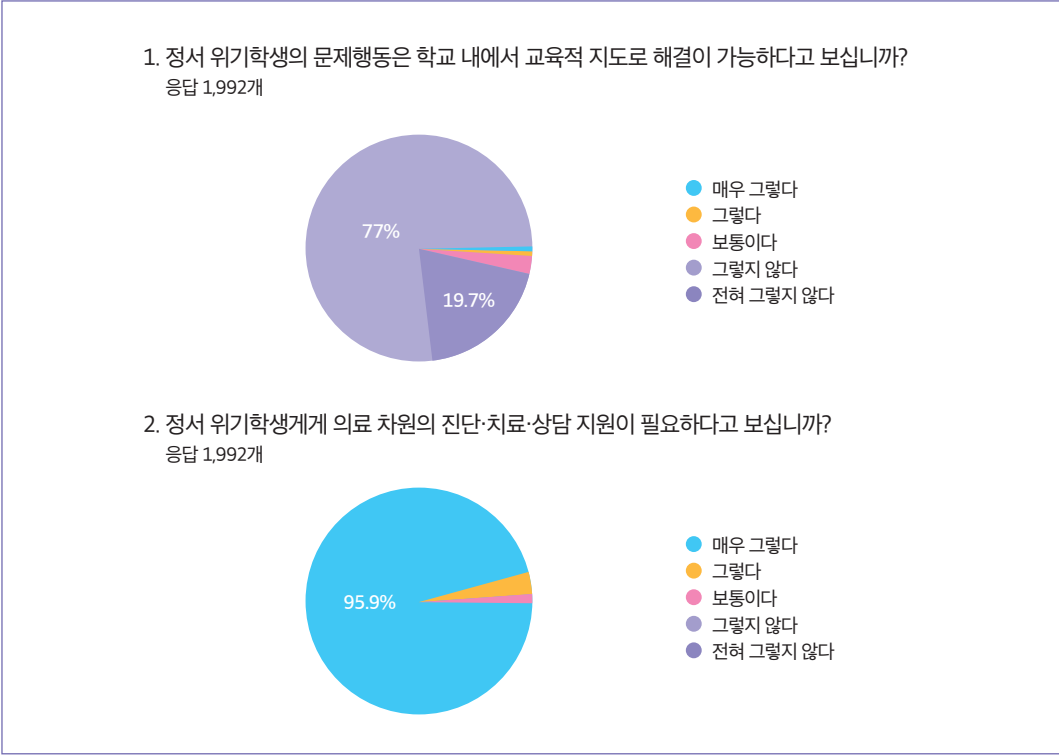
나. 학생의 배울 권리: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이러한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의 경우다.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가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학생들이 산재하여 있으나, 지금까지 이런 학생들은 올바르게 정의되거나 조사되고 표집된 적조차 없다. 교육부 등의 공식 문건에서도 ‘심리정서’, ‘정서행동’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학생을 ‘정서 위기학생’으로 명명하였고,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이란 심리적 원인·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스트레스, 불안, 심리적 트라우마, 우울증, ADHD, 품행장애, 틱장애, 반항장애, 충동조절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중독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의 2024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정서 위기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교사들은 호소하고 있다. 92.4%의 교사가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80%의 교사가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교권 침해를 경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가 가능한 법제도 정비다(교사들이 응답한 해결책 1위). 그러나 단순히 학교 내의 교육적 지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 사회가 아동을 지원할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절대 다수의 교사들이 진단한 이 해결책은 ‘의료적 개입’이었다. 의료적 개입 및 지원, 상담 및 심리 치료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성과도 결이 비슷하다.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은 더 이상 전통적인 교사와 학생 사이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한 초학문적 접근(Trans-Disciplinary Approach)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림 V-2-2]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 정서 위기학생 학교 현장 실태조사



다. 보편적 학습 설계와 교육자원 투입

1) 특수교육학적 접근에 의한 개별화교육 개념 도입

상기 초학문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들은 일반교육이 현재 지향하는 도달점이기도 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인 ‘학령인구 감소 및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반 필요’²³⁾에 명시된 맞춤형 교육 역시 특수교육의 기초적·필수적 개념인 개별화교육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별화교육은 모든 학습자의 의미 있는 교육 성취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 현장의 여건으로는 개별화교육(학습자 맞춤형 교육) 실현이 불가능하다. 개별화교육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보, 교사 행정업무 감축, 생활지도를 위한 법제도 정비, 민원 처리 시스템 마련, 교육과 보육의 분리 등의 제반 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보편적 학습 설계(UDL)

개별화교육 이전 단계로서 교육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를 고려할 수 있다.

보편적 학습 설계(UDL)는 디자인 용어인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UD)에서 파생된 용어다.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 등 모두가 접근 가능한 시설 디자인을 일컫는 UD(보편적 설계)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 편리해지면 모두가 한층 더 편리해진다는 관념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은 이동 약자가 가장 편리해지지만, 동시에 모두가 편리해지는 UD에 의한 시설이다.

유연성과 포용성을 지향하는 UD에서 개념을 확장하여, 모든 학생이 접근 가능한 교육을 설계하는 것이 UDL이다. 교육 목표나 방법, 내용 등을 처음 구성할 때 더욱 다양한 학생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획일적인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모두가 그 목표를 따라가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낙오되는 체제가 아니라,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 삶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UDL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UDL은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한다. 기존에 수업에서 소외되고 낙오되던 학생들은 주로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느린학습자 등 사회의 계층

과 갈등을 상징하는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UDL을 기반으로 하는 모두 참여 수업 실현은 계층과 집단 차를 극복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UDL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교사가 개별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여건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 목표와 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학생의 권리와 그에 수반되는 의무’를 상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제도적으로 명확해져야 한다. 학생이 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나, 그것이 결코 학생과 보호자의 의무가 부재한 개인의 방종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라.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여건 개선 정책

학교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교사의 가르칠 권리 보장(교권 보호), ② 학생의 배울 권리 보장(학습권 보장), ③ 보편적 학습 설계(UDL) 도입 등 교육 격차 해소와 이를 위한 교육 현장의 제반 여건 개선(그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등 포함)이 필수적이다.

현재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강조하지만, 책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교사의 수업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환시대에는 소수의 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구성,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대학의 혁신과 미래 전략 **조동성**

21세기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기술과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등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의 삶과 경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성장 동력과 인재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대학이 있다.

23) 교육부, 2021.11.24.,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3쪽

대학은 더 이상 단순한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국가 혁신의 심장부이자 미래사회의 인재와 기술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초연결·초지능화 사회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혁신이 절실하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대학의 혁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대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혁신 전략을 고찰하고, 한국형 미래 대학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변화하는 시대, 대학의 역할 재정립

1)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은 산업 구조뿐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창의적 문제 해결과 융합 사고를 갖춘 인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전통적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하이브리드 교육, 실무형 캡스톤 디자인 등 능동적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평생학습 시대와 대학의 확장

수명 100세 시대에 진입하면서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은 졸업생뿐 아니라 재직자, 경력 단절자, 시니어 계층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 교육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지속 가능한 학습 공동체로 확장된다.

3) 글로벌 연결성 강화와 대학의 국제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글로벌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국제 캠퍼스 설립,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인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 대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나. 한국형 미래 대학의 핵심 혁신 전략

1)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캠퍼스 구축

미래 대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스마트 캠퍼스로 진화한다. 클라우드 기반 학사 관리 시스템, AI 튜터링 서비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활용한 가상강의실, 메타버스

캠퍼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물리적 제약을 넘어 글로벌 학습 커뮤니티를 실현한다.

2) 융합교육과 초학제적 연구 강화

전통적인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미래 대학 혁신의 핵심이다. 공학과 인문학, 경영학과 예술 등 이질적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며, 문제 중심의 초학제적 연구를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융합 전공’ 개설과 ‘산학연 연구 클러스터’ 운영이 필요하다.

3) 산학협력의 고도화와 인재 매칭 플랫폼

대학과 기업 간의 협업은 단순한 인턴십을 넘어 ‘기업맞춤형 교육과정(Co-Design)’과 ‘현장연계 실습(Co-Work)’으로 심화된다. 대학은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기업은 연구개발과 취업 연계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나아가 AI 기반의 인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학생과 기업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다. 미래 대학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1) 교수자의 역할 변화: 학습 촉진자와 코치

미래 대학에서 교수자는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멘토’이자 ‘코치’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촉진자로 변모한다.

2) 학생 중심 교육과 개인화 학습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성향에 맞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개인화 학습’이 확산되고 있다. 학점제 유연화와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나노 디그리(Nano Degree) 등 학생 주도형 학습 설계가 활성화되며,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이 전환된다.

3)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미래 대학은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캠퍼스 운영과 연구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사회 혁신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지원 등도 대학의 주요 역할이 된다.

라. 한국 미래 대학의 비전과 기대효과

1) 글로벌 혁신 인재 양성의 허브

혁신적 커리큘럼과 초연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한국의 미래 대학은 글로벌 인재 양성의 허브가 된다. AI, 바이오, 우주항공, 지속가능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선도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2) 기술 기반 사회혁신 촉진

스마트 캠퍼스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은 기술 혁신의 전초기지가 된다. 대학이 생산하는 데이터와 연구는 기업과 사회 전반에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견인한다.

3) 산업과 사회를 연결하는 지식 플랫폼

대학은 산업계, 정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 열린 캠퍼스와 개방형 교육 콘텐츠는 국민 누구나 학습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사회 전반의 지식 역량을 향상시킨다.

한국의 미래는 대학의 혁신에 달려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산업 구조, 그리고 초연결 사회 속에서 대학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과 기술을 혁신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재탄생해야 한다. 한국형 미래 대학은 디지털 전환과 융합교육, 산학협력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대학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학이 혁신의 선두에 서야 하며, 그 혁신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박인형**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확대되고 있다.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학교 현장은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AIDT 교과서 수용 등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과 함께 미래교육 대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자녀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하는 교육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교육 및 제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경우

에 자녀의 학업성취도, 학교적응 및 진로성숙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그러나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은 교육의 동반자로서의 현재 학부모의 역할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점과 불만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부모가 부모와 學부모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진정한 학부모로서, 역할에 대한 역량을 스스로 고민하고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부모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역량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성숙한 자세에서 받아들이고 개발시켜 학부모가 교육의 진정한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학부모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부모와 학부모의 역할이 혼재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또한 주로 유아나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2025년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학부모는 처음이라’에서는 영아기부터 성인기 초반까지 발달단계별로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5대 학부모 역량(자기돌봄, 부모역할기본, 자녀교육, 학교협력, 자녀자립지원)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5가지 핵심역량군을 통해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하며 학부모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이를 통해 학부모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여 기본예절과 인성을 함양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학부모 역량의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1) 자기돌봄 역량

가장 기본이 되는 학부모 역량으로, 부모가 학부모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 자신의 내적 생태를 관리하는 능력이다. 다른 역량들의 질적 발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모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이 부모로서 건강하게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자기 이해 및 성찰 역량이 포함된다. 또한 부모로서의 자기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부모로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심신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자기관리 및 성장 역량도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주변과 함께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적절하게 형성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2) 부모역할기본 역량

부모가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 자기돌봄 역량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자녀의 현재 발달 특성과 성향 및 기질 등을 이해하는 자녀특성 이해역량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의 밑거름이 되는 신체적, 심리

적 건강을 관리하고 자녀와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긍정적 양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능력 또한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자녀를 가족의 소중한 한 구성원으로 존중하며 화목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3) 자녀교육 역량

학부모는 사회변화를 고려하되,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관을 정립하여 자녀에게 적합한 학습적, 인성적 교육을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녀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생활 예절과 질서를 준수하며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예절과 인성지도 역량이 포함된다. 또한 학업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지원을 지양하고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도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학부모로서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고 자녀의 사회적 인성 수준은 대부분 부모의 인성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인성교육 역량은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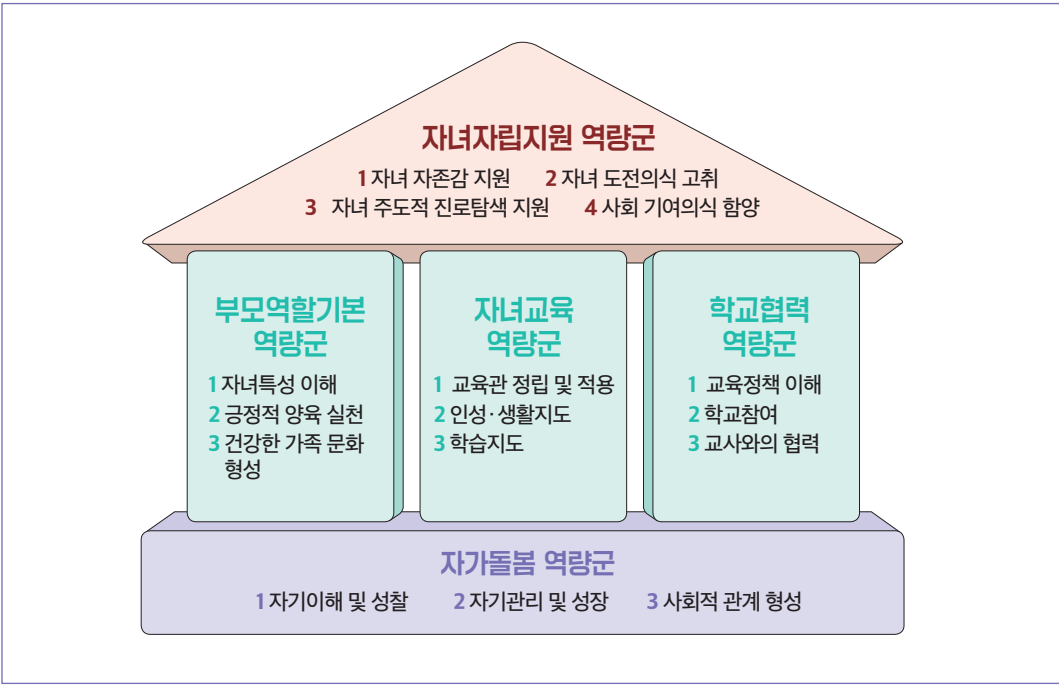
4) 학교협력 역량

학교협력 역량은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녀의 연령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이나 교육과정, 사회변화 등의 내용을 알고 이를 자녀 교육에 맞도록 적절하게 반영하는 교육정책 이해역량이 포함된다. 또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 교사와의 협력 역량을 통해 학교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신뢰하는 관계를 맺고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5) 자녀자립지원 역량

학부모가 자녀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녀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역경에서도 잘 회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도전의식 고취를 통해 자녀가 열린 마음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자녀주도적 진로탐색 지원 역량은 자녀가 자신의 관심사와 스스로의 강점을 알고 그것을 다양한 직업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진로와 연관된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자신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책임감 있게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녀를 지도하는 사회 기여의식 함양 역량도 필요하다.

[그림 IV-4-1] 역량중심성장형 학부모교육 프레임워크, 교육부(2025)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은 자녀의 영아기부터 학령기 12년 이상의 생활을 담은 방대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은 자녀가 사회의 한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이며 이를 이끌어가는 최초의 주체는 학부모라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역량에 따라 영아기의 자녀가 유아기와 학령기를 거쳐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부모의 역량을 기르는 학부모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 단순히 학부모간 친목을 도모하고 연수 개최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5가지 학부모 역량인 자기돌봄 역량군, 부모역할 기본 역량군, 자녀교육 역량군, 학교협력 역량군, 자녀자립 지원 역량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각 역량군의 세부적인 역량들을 기를 수 있도록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 교육 역량 프레임워크가 추구하는 학부모 교육의 목적, 방향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가 충분히 이해하고 발전시켜 이러한 학부모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및 지역사회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자녀 학령기 발달단계를 시작하는 학부모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일원화시키고 필요에 따라 학부모 연수 강화 및 체계화를 통해 학부모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미래 세대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정희선**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투자란,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정체성 혼란, 과도한 경쟁, 디지털 과의존 등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곧 정신건강 악화와 더불어 마약류 중독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건강 교육과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교육현장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① 자기 인식과 감정 조절 능력 함양, ②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감 및 소통 능력 배양, ③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탄력성 향상이라는 정신건강의 핵심 가치를 길러내는 공간이어야 한다.

가.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현황

정신건강은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겪는 심리·정서적 혼란은 곧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며, 청소년 우울증, 불안장애, 자해 및 자살 시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과 같은 심각한 2차적 위협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신건강은 마약류에 의한 위협에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정신건강은 중독 위험을 낮추는 방어기제로 작용한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에 취약한 정신상태는 현실 회피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는 마약류나 향정신성 물질에 의존하려는 충동을 촉진하고, 특히 청소년기의 감정 조절 능력 부족과 충동성은 마약류 접근 시 중독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요인이 된다.

둘째, 정신건강 교육은 마약류 예방의 선제적 수단이 된다. 단편적인 ‘마약의 위험성’ 주입이 아닌, 자기이해, 감정표현, 스트레스 대처 전략 등을 포함한 전인적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는 심리적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 핵심 기반이 됨을 의미한다.

셋째, 현재 정신건강과 마약류 중독 문제는 동시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우울·불안장애 유병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동시에 신종 마약류, 처방약 오남용,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 등 접근 경로의 다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빈도도 높

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마약 유통 환경은 기존의 규제 체계를 우회하며, 정신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나 마약류 예방에 대한 교육이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예방과 조기 개입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문 상담인력 부족, 교사 대상 연수 부재, 정책적 연계의 미비 등은 현장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정신건강과 마약류 중독은 분리된 문제가 아닌, 상호 연결된 위험군으로 접근해야 하며, 교육정책은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래세대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 중 하나가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중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나. 추진 방향

정신건강 악화와 마약류 중독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위험 요인으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과의 통합적 접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청소년기 정신적 취약성이 마약류 유입의 진입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은 단순한 중독 예방을 넘어 정신건강 증진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개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1)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및 제도화

정신건강 교육과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별개의 주제가 아닌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주제로 통합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단계별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는 자기이해, 감정 조절, 스트레스 대응, 충동성 관리 등 내면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 함께, 실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 기전,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병행하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제 위험 상황에서 자기보호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지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본다.

2) 조기개입 중심의 학교 기반 지원체계 구축

정신건강 이상이 마약류 사용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적 선별검사 및 상담 시스템을 학교 단위에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우울·불안 경향성이 높은 학생이나 급격한 행동 변화가 관찰되는 학생에게는 선제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이 긴밀히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마약류 사용 이전 단계에서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실제 중독으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3) 교육 주체(교사·학부모·학생)의 공동 역량 강화

정신건강과 마약류 예방은 단일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주체 전반의 인식 제고와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관련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교육자료와 상담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학생 대상 캠페인,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 기반의 예방 문화를 형성한다.

4) 지역사회 및 의료자원과의 연계 강화

학교 중심의 예방 노력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마약류 치료경험자, 정신건강 회복자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과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을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다. 정책 제안

정신건강 악화와 마약류 중독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제안한다.

1) 제도 기반 강화

① 정신건강 및 마약류 예방교육의 교육과정 내 의무화

정신건강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초·중·고 교육과정에 필수 요소로 편입하며, 정규 교과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 및 진로교육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특히 발달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자료와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병행하도록 한다.

② 학교기반 정신건강 관리법 제정 또는 개정

‘학교보건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학교 내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위험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역 정신의료기관 연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다.

③ 청소년 대상 디지털 마약 접근 차단 정책 연계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 차단 정책(예: 사이버 범죄 단속, 필터링 강화)을 교육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 연계하여, 교육과 단속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

① 전문 인력 배치 확대

정신건강 전문상담교사와 약물중독 예방 전문 교사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반드시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지역 간 인력 편차 해소를 위한 순회전담제 도입도 고려한다.

② 심리중재·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교육청 단위에서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인드풀니스, 회복탄력성 훈련, 디지털 해독 캠프 등)과 마약류 중독 예방 체험교육에 대한 별도 예산 항목을 확보하여 장기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연수 지원 강화

정신건강과 중독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이수 실적을 정책 평가에 반영한다.

3)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①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마약류 노출 위험 분석 정례화

매년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 및 약물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연령별 위험군 분포를 파악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교 단위 예방교육 효과성 평가 및 개선 시스템 운영

각급 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신건강·약물 예방 교육의 내용, 횟수, 만족도 및 실제 행동 변화 등을 측정하여 교육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교육청 및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한다.

③ 위기학생 조기 경보 및 지원 체계 구축

학교생활기록부, 상담기록, 출결자료, 교사관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정신건강 및 약물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탐지하고, 개별 맞춤형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와 같은 정책 제안은 예방적 교육 강화 → 위험군 조기 탐지 → 다기관 연계 개입이라는 흐름에 기반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마약류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정신건강의 위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마약류 중독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공존하는 시기로, 정신건강의 악화가 곧 중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연구와 사례가 존재한다.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준비하는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자율적이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자원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교육과 마약류 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지원,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구조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장에서 제시한 추진 전략과 정책 제안은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중독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는 단기적 위험 회피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시민성과 사회적 회복력을 갖춘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교육 정책의 혁신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 안전망 강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가치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VI. 교육은 백년 대계: 미래교육의 방향과 기본 가치 **이배용**

우리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 온 세상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는 보다 창의적이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될 것이다. 또한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가파른 기후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 소식이 들리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이나 식량 자원의 고갈에 따른 기근 난민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유례 없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이며,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 미래 교육의 인재상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미래 교육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며 우리는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인재상을 설정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키워갈 인재는 자신과 타인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삶을 실천해 가는 품성을 갖추야 할 것이다. 또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재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시야에 두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며 기후 위기나 식량 부족과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적·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 대전환시대 미래 교육의 기본 가치

급변하는 시대적 전환기에 인성의 회복, 창의성과 도전 정신의 함양,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희망 사회 실현을 우리 미래 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로 제안하고자 한다. 바른 인성의 함양은 어느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였다. 특히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대에는 올바른 도덕성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물질주의와 사회적 성공의 경도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풍부한 감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에 따른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 교육은 우리 사회가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

도전 정신의 함양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창의성, 그리고 실패 가능성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용기와 끈기일 것이다. 격려와 칭찬, 성취의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학습자들이 평생에 걸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진취적인 삶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희망 사회의 실현은 미래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속가능한 세상,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정한 희망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며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원천이 될 것이다.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기대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등대 역할을 할 것이다.

다. 미래 교육의 목표와 방향

미래 교육의 목표로 모두가 함께하며 성장하는 희망을 키우는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교육은 우리 미래에 희망의 원천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은 모두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뒤처지는 학습자가 없도록 배려하고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학습자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우는 이와 가르치는 이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 교육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면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져왔다. 교육이 그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를 전 세계가 신뢰하고 배우고 싶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훌륭한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연계하여 우리 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창의적인 교육”이다.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산업,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 직업 생태계의 변화와 글로벌 무한 경쟁의 시대에 다음 세대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무대에서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창의적으로 변모해야 될 것이다. 서열에 매몰된 획일적 교육 체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각하는 힘과 도전 정신을 키워주는 진취적인 교육”이다.

우리가 미래 사회로 갈수록 해결해야 될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정보의 양이 폭증하면서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고 공감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단순한 암기나 정형화된 사고는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미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료 깊은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신의 삶과 이 시대를 성찰하는 안목을 지니고, 융합적인 사고력과 탐구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고의 힘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은 시대를 관통하여 우리 전통 교육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전통 교육 중 고전 읽기 교육은 박학, 심문, 신사, 명변, 독행의 5단계로 사고의 힘을 기르고 아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박학은 널리 배워 스스로 읽고 습득하는 단계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심문은 스스로 깊이 알고 배워 깊이 질문하여 탐구하는 단계이다. 신사는 신중히 사려깊게 생각하여 논리가 가능한 단계로 사고의 깊이를 더해가게 되며, 명변에서는 깊은 사고 속에서 명확한 논변과 논리가 형성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깊이 있는 사고의 마지막 단계인 독행은 깊이 아는 것을 충실히 실천하는 단계로 우리 선조들이 학문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깊이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이렇듯 시대를 관통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가치와 방향이 있다. 우리 전통 문화 유산을 통해서 선조들의 창의성, 조화와 배려 등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들을 눈여겨 살펴보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감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따뜻한 교육”이다.

우리 사회가 물질과 기계 문명의 홍수 속에서 갈수록 인간미가 사라지고 각박한 경쟁이 만연할수록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힘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 위기나 인공 지능 윤리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보하고 협력하는 지혜도 절실하다. 이러한 과제들을 교실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며 스승에 대한 존경, 제자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친구들 간의 존중과 신뢰가 넘쳐나는 교실, 그래서 학교가 즐겁고 행복하며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라. 변하지 않을 기본 가치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전통 시대부터 교육열이 남다른 국가이며,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일념으로 6.25전쟁의 피난 속에서도 교육의 열정을 놓치지 않았다. 한국의 서원 9곳이 성리학 교육 유산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근심하고 있고,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깨울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 디지털 매체와 인공지능이 많은 교육을 대신한다 해도 스승과 제자의 위치는 교육의 가장 큰 핵심 가치이다.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고 학생들은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모습들이 학교 현장에서 살아날 때 진정한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교는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노는 곳이자 꿈을 향해 바른 길, 밝은 길을 가도록 희망을 주고, 때로는 어려운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을 심어주는 곳이어야 한다.

교육은 미래 세대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또 함께 가기 위해 손잡아주며, 뒤따라 오는 학생들을 돌아보고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 학교 밖 학생들도 놓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애다. 현대 사회는 인간애를 너무 많이 잊어버렸다. 물질, 기계, 인공지능까지 시대의 주류가 되어 어느새 본질이 밀려나 버렸다. 인공지능에게 따뜻한 피, 따뜻한 가슴은 없지 않은가. 인공지능도 메타버스도 기능적으로는 당연히 활용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누고 아끼는 온정이 살아있는 그러한 인재들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일 것이다. 그러한 인성 교육이 살아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찍이 퇴계 선생께서는 평생 교육자로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교육의 역할은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 전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진정한 선량함이라는 것은 모든 나쁜 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며,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하나 우리에게 생명 같은 힘일 것이다. 멀리는 백 년의 길을 내다보며 이 시대에 꼭 지켜야 할 정신을 가르치고 지식뿐만 아니라 영혼을 일깨워 나라와 역사의 주인으로서 사명감도 심어주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였으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 민족의 오늘날이 결코 쉽게 걸어온 길이 아니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각고의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온 선조들의 노력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자연의 순리도 가슴에 새겨 주어야 한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는 순리와 자연에는 서로를 어우르는 조화와 질서가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자연의 순리를 깨닫을 때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과오를 범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 약한 것에 대한 연민의 정을 마음에 품고 나눔의 배려, 받음의 감사함이 늘 함께할 때 우리 사회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행복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연구원(2015). 4·16교육체제 비전과 전략 연구 (기본연구 2015-05). 경기도교육연구원.

-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세종: 교육부.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2018). 2018년 학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보고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5). 학부모는 처음이라. 세종: 교육부.

- 김상섭, 임연옥(2023).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부모연구, 10(2), 23-45.

- 김은영, 윤영, 박하연, 서상희(2024). 역량 중심 학부모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량모형 개발 연구, 12(1), 51-78.

- 김은영, 권순범(2023). 정부부처 (학)부모교육 자료 현황 및 내용 분석: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10(2), 1-21.

- 김이경, 박진, 김경현(2024).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연구.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 김지훈(2023).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정책 국내·외 사례 탐색, 전북교육정책, 교육동향분석, 8호.

- 권현영(2022).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 산업을 넘어서는 영향. 서울: 디지털사회연구소.

- 박남기(2017). 실력의 배신. 서울: 다산초당.

- 박용수(2021).『교육감 선거 교육이 망가지는 이유』. 서울: 선.

- 부산광역시교육청(2025). 2025 부산교육. 부산광역시 교육청.

- 양희준(2023). “학생 수 감소와 미래의 교육”. 교육트렌드2024집필팀 편(2023). 대한민국교육트렌드 2024. 서울: 에듀니티.

- 양희준, 박근영, 이재준, 허준, 박상욱(2022). 지방소멸시대의 농촌교육,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 서울: 학이시습.

- 오천석(2014).『한국신교육사』. 서울: 교육과학사.

- 이경숙, 김수정(2021).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수업 질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7(2), 45-62.

- 이상욱 외(2025).『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 이상호(2024).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지역산업과 고용(2024 여름호). 진천 : 한국고용정보원.

- 이재훈(2019).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국가 전략: 자국 이기주의와 다자주의의 충돌. 국제무역연구, 35(1), 23-48.

- 이정우(2020). “세대 갈등과 이념 대립: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분석.” 사회과학연구, 31(2), 55-83.

- 정미경 외 7인(2016).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 초·중등교육 영역.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6-28.

- 조영환(2017). 싱가포르 역량교육 사례. 해외교육동향. 에듀인 뉴스.

- 진미정, 윤영(2020). 한국의 미래교육을 대비한 미래학부모역량 연구.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최수진, 김은영, 김혜진, 박균열, 박상완, 이상은(2019).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전략 탐색. 한국 교육개발원

- 통계청(2024).『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2020). 2024 인구 보고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 뉴스1 (2014. 6. 1.).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 선거 완주(2보)”,

-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1703051> 2025. 3. 6. 인출

- Acemoglu et al.(2023) Power and Progress: Our Thousand-Year Struggle Over Technology and Prosperity. New York: Public Affairs.

- Carr(2011) The Shallows: How the Internet is Changing the Way We Think, Read and Remember. New York: Atlantic Books.

- Haidt(2024) The Anxious Generation: How the Great Rewiring of Childhood Is Causing an Epidemic of Mental Illness. New York: Penguin Books.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OECD(2021). The digital divide in education. <https://www.oecd.org/en/ topics/digital-divide-in-education.html>

- OECD(2024) The Potential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Equity and Inclusiveness in Education. OECD.

- Tan, J. P., Koh, E., Chan, M., Costes-Onishi, P., & Hung, D.(2017). Advancing 21st century competencies in Singapore. Asia Society: Center for Global Education.

- Tyack, D., & Cuban, L.(1995). Tinkering toward utopia: A century of public school reform. Harvard University Press.

- UN(2024) Mind the AI Divide: Shaping the Global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Work.

- UNESCO(2021a)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UNESCO(2021b) AI and Education: Guidance for Policy-makers.

- UNESCO(2023)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미국연방정부 교육부 산하) 홈페이지(2025). https://nces.ed.gov/programs/digest/d23/tables/dt23_214.10.asp 2025. 2. 27. 인출